



一般社団法人 国際歴史論戦研究所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ontroversial Histories

第四回

日韓合同 シンポジウム 2025



資料

令和 7 年（2025 年）11 月 27 日（木）

文京区民センター 3A 会議室

目 次

【 I. 基調講演 資料 】

1. 「韓国慰安婦運動の現状と学校教育、そして今後の解決策」 ----- 4
金 柄憲 （韓国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
2. 「李在明政権が揺さぶる日韓関係 ～日本統治時代をめぐる真実～」 ----- 26
呉 善花 （評論家・東京国際大学教授）

【 II. 国際歴史論戦研究所 論説集 】

1. 「韓国は漢字の復活を」 ----- 31
「한국은 한자의 부활을」 ----- 35
宮本富士子 （国際歴史論戦研究所 ゲスト・フェロー）
2. 「韓国の憲法はどのように改正したらよいか」 ----- 39
「한국의 헌법은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까」 ----- 46
杉原 誠四郎 （国際歴史論戦研究所 会長）
3. 「李在明政権と日韓関係」 ----- 53
「이재명 정권과 한일관계」 ----- 56
松木 國俊 （国際歴史論戦研究所 上席研究員）
4. 「故安倍晋三氏がトランプ大統領に託した言葉～「慰安婦」と日韓関係」 ----- 60
「고아베 신조씨가 트럼프 대통령에 맡긴 말~「위안부」와 한일관계」 ----- 63
山本優美子 （国際歴史論戦研究所 所長）
- これまでの国際シンポジウム ----- 66

I

基調講演 資料

「韓国慰安婦運動の現状と学校教育、そして今後の解決策」



金 柄憲

韓国国史教科書研究所 所長

プロフィール

成均館大学校漢文学科博士修了。東国大学史学科博士修了。韓国の歴史学者、大学講師。韓国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代表を務めている。2019年からソウル駐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前の少女像撤去を要求する集会を開いている。近著『赤い水曜日、30年間の慰安婦歪曲』の日本語版を文藝春秋より出版。

韓国慰安婦運動の現状と学校教育、そして今後の解決策

金柄憲 / 國史教科書研究所長

韓国慰安婦運動の現状

金学順記者会見- 1991. 8. 14.



大韓民国の慰安婦運動は1991年8月14日、金学順の登場で本格的な活動が始まった。この日、金学順は自分が日本軍に連れ行かれた挺身隊被害者だと鬱憤を吐いた。대한민국의 위안부 운동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이날 김학순은 자신이 일본군에게 끌려간 정신대피해자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金学順記者会見- 1991. 8. 14.



だが、金学順は養父に40ウオンで売られ、平壤妓生学校を卒業して中国に行き売春婦生活をした女性だ。日本軍に連れて行かれたこともなく、日本軍に虐待を受けたこともない。出発時点から嘘である。

하지만, 김학순은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려가 평양기생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서 매춘부 생활을 한 여성이다. 일본군에게 끌려가지도 않았고, 일본군에게 학대를 받은 적도 없다. 출발부터 거짓말이다.

水曜デモ- 1992. 1. 8.

5



1992年1月8日、宮沢日本首相の訪韓を控えてユン・ジョンオクが主導した挺対協が駐韓日本国大使館正門前で日本政府に6つの要求事項を提示しデモをした。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일본 수상방한을 앞두고 윤정옥이 주도한 정대협이 주한일본국 대사관 정문 앞에서 일본정부에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시위를 하였다.

水曜デモ- 1992. 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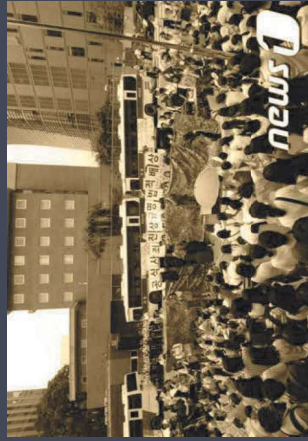
6



1. 朝鮮人女性強制連行の事実を認めよ。
 2. 公式謝罪せよ。
 3. 蛮行の全貌を自ら明らかにせよ。
 4. 犠牲者追悼碑を建てろ。
 5. 生存者と遺族に賠償せよ。
 6. 教育を実施せよ。
1. 조선인 여성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라
 2. 공식 사죄하라.
 3. 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혀라.
 4. 희생자 추모비를 세워라.
 5. 생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라.
 6. 교육을 실시하라.

水曜デモ- 1992. 1.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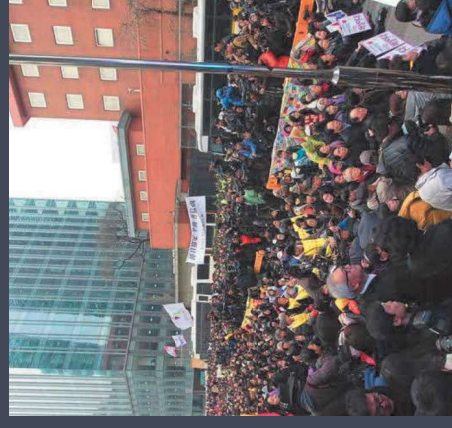


しかし、まず「日本軍の強制連行」という前提から偽りであるため、残りは言及する必要もない。日本軍に就職詐欺、誘引誘拐、拉致などの方法で連行された朝鮮人女性がいらないからだ。

그러나 첫번째 ‘일본군의 강제연행’이라는 전제부터 거짓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일본군에게 취업사기, 유인 유괴 납치 등의 방식으로 끌려간 조선 여인이 없기 때문이다.

少女像設置- 2011. 12. 14.

8



挺対協は水曜デモ1000回を迎える2011. 12. 14.在韓日本大使館の正門前に慰安婦に対する偽りの情報をもとに製作された、いわゆる「平和の少女像」を設置した。大使館の前には大勢の人が道路を埋め尽くした。

정대협은 수요일 위 1000회를 맞이하는 2011. 12. 14. 주한일본국대사관 정문 앞에 위안부에 대한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소녀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대사관 앞에는 엄청난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웠다.

少女像設置 - 2011. 12. 14.

9



しかし、水曜デモも少女像も全て「強制連行」という前提であるため偽りであるだけでなく、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協約にも違反している。以後、少女像を中心に行われた水曜デモは2025年11月現在、34年間続いている。

하지만, 수요일위도 소녀상도 모두 ‘강제연행’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어서 거짓일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협약 위반이다. 이후 소녀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수요일위는 2025년 11월 현재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水曜デモ - 2019. 8. 14.

10

水曜デモ1400回の2019年8月14日、「日本軍慰安婦被害者記念日」には主催側推算で2万人が集まった。彼らは日本政府に1)戦争犯罪認定、2)真相究明、3)公式謝罪、4)法的賠償、5)責任者処罰を要求した。

수요일위 1400회인 2019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념일’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2만명이 모였다. 그들은 일본정부에게 1)전쟁범죄 인정 2)진상규명 3)공식사죄 4)법적배상 5)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水曜デモ - 2019. 8. 14.

11



これもやはり「強制連行」という誤った前提から出発した誤った要求である。そして、この日を頂点に正義連の水曜デモは下り坂を走る。「慰安婦詐欺の清算」を叫ぶ反慰安婦運動勢力が登場したのである。

이 역시 ‘강제연행’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잘못된 요구이다. 그리고, 이날을 정점으로 정의연의 수요일위는 내리막길을 달린다. 위안부사기 청산을 외치는 반위안부운동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水曜デモ - 2022. 2. 2.

12



2022年2月2日の水曜デモにはわずかに10人余りが集まった。名節ではあったがこんなに少なく集まったのは初めてのことだった。

2022년 2월 2일 수요일위에는 겨우 10명 남짓 모였다. 비록 명절날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적게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反慰安婦運動

反慰安婦運動 - 2019. 12. 4.

2019年12月4日、正義記憶連帯の水曜デモの横では反慰安婦運動勢力が慰安婦銅像と労働者銅像の撤去を要求する集会を開催した。

2019년 12월 4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행사장 옆에서는 반위안부운동 세력이 위안부 동상과 노동자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反慰安婦運動 - 2019. 12. 11.

慰安婦像を撤去し、水曜デモを中断せよというピ켓デモを行ったイ・ウヨン博士は、怪しい男から暴行を受けたりもした。

위안부상을 철거하고, 수요시위를 중단하라는 피켓시위를 진행한 이우연 박사는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反慰安婦運動 - 2020. 2. 26.

私は2020年2月26日、正義連の水曜デモ行事事会場のすぐそばでピケットを持って慰安婦問題の真実を知らせる1人デモを始めた。万が一の事態に備えて街灯を背にデモをした。

나는 2020년 2월 26일 정의연의 수요시위 행사장 바로 옆에서 피켓을 들고 위안부문제에 진실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로등을 등지고 서서 시위를 했다.



反慰安婦運動- 2020. 2. 26.

17



ピケットの内容-

「日本軍慰安婦、何故強制連行と言うのか？」慰安婦、金学順は母親が人身売買犯に40ウォンで売ったのに！」

피켓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어째서 강제연행인가? 위안부 김학순 어머니가 인신매매범에게 40원 받고 팔았다.”이다.

反慰安婦運動- 2020. 10. 5.

18



2020년 10월,私は市民団体「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を結成し、大統領領府前で「慰安婦被害者法を廃棄せよ」という内容で最初の活動を始めた。

2020년 10월, 저는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하여 청와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反慰安婦運動- 2021. 1. 13.

19



そして、大雪が降ったソウル南山慰安婦記憶の地で集会を開催した。人数は少なかったが、私たちのメッセージは強烈だった。

그리고, 폭설이 내린 서울南山위안부기억의터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인원은 적었지만 우리의 메시지는 강력했다.

反慰安婦運動- 2021. 1. 13.

20



横断幕の上段には「日本軍慰安婦問題は哀れな慰安婦を前面に出して国民を欺き世界を欺いた国際詐欺劇！」という文があり、

横断幕上段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불쌍한 위안부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사기극!’이라는 글이 있으며

反慰安婦運動- 2021. 1. 13.

21

中央に大きな文字で「日本軍慰安婦強制動員と性奴隷説は詐欺」という内容がある。 가운데 큰 글씨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설은 사기’라는 내용이 있다.



反慰安婦運動- 2022. 12. 15.

22

公共機関の安山市庁前に設置された少女像撤去集会。横断幕は「慰安婦問題は正義記憶連帯と女性家族部が慰安婦履歴の哀れな老人たちを前面に出して国民と世界を欺いた国際詐欺欺劇だ！」



공공기관인 안산시청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집회입니다. 횡단막은 “위안부 문제는 정의연과 여가부가 위안부 이력의 불성실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세계를 속인 국제사기극”이다.

反慰安婦運動- 2022. 12. 15.

23

ピケットの内容は「日本軍慰安婦3大詐欺は日本軍強制動員説、日本軍性奴隷説、日本軍戦争犯罪説」と表記。 피켓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3대 사기는 일본군 강제동원설, 일본군 성노예설, 일본군 전쟁범죄설”이다.



反慰安婦運動- 2022. 12. 15.

24

横断幕の内容は「慰安婦詐欺劇の象徴、少女像を撤去せよ！」 횡단막 내용은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 소녀상을 철거하라’이다.



反慰安婦運動- 2022. 6. 26.

25



2022年6月にはドイツベルリンのミッテ区に設置された少女像撤去集会を行った。そして5年後の2025年10月17日、該当銅像はついに撤去された。

2022年 6월에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집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25년 10월 17일 해당 동상은 철거되었다.

베를린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 2022. 6. 26.

反慰安婦運動- 2023. 9. 6.

26



2023年9月にはソウルの日本大使館近くで、日韓の反慰安婦運動勢力が第3回慰安婦問題シンポジウムに続き、慰安婦詐欺の中止を求める共同集会を開催した。

2023년 9월에는 서울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한일 반위안부운동 세력이 제3차 위안부문제 심포지움에 이어 위안부사기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개최했다.

反慰安婦運動- 2023. 9. 6.

27



正義連の水曜デモの会場のすぐそばで、また日本大使館の少女像のすぐそばで日の丸と太極旗を翻しながら集会を行った。

정의연의 수요일위 행사장 바로 옆에서, 또 일본대사관 소녀상 바로 옆에서 일장기와 태극기를 휘날리며 집회를 진행한 것이다.

少女像撤去マスクチャレンジ活動- 2024. 2.~11.

28



2024年2月から水原市庁前の公園にある少女像を皮切りに「少女像撤去マスクチャレンジ活動」を行った。

2024년 2월에는 수원시청 앞 공원에 있는 소녀상을 시작으로 '소녀상 철거 마스크 챌린지'를 진행했다.

少女像撤去マスクチャレンジ活動- 2024. 2.~11. 29



「撤去」と書かれたマスクをかぶせたり、「慰安婦詐欺」と書かれたたすきを掛けた後、写真を撮ってSNSに公開するパフォーマンスだ。

철거라고 쓴 마스크를 씌우거나 위안부사기라고 쓴 어깨띠를 두른 다음 사진을 찍어 SNS에 공개하는 퍼포먼스였다.

少女像撤去マスクチャレンジ活動- 2024. 2.~11. 30



ある時は撤去と書いた黒いビニール袋を少女像にかぶせたりもした。もちろん、このため軽犯罪処罰法違反で罰金を払ったりしましたが、反応はすごかった。

어떤 때는 철거라고 쓴 검은 비닐봉지를 소녀상에 씌우기도 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기도 했지만 반응은 대단했다.

少女像撤去マスクチャレンジ活動- 2024. 2.~11. 31



横断幕の内容は、慰安婦問題は正義記憶連帯と女性家族部が、「慰安婦」履歴の哀れな老人たちを前面に出した国民と全世界を欺く国際詐欺劇！」

횡단막 내용은 위안부문제는 정당막 이력이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전세계를 속인 국제사기극! -위안부반대지국민행동-

少女像確保 - 2025. 7. 23. 32



2025年7月23日、1人デモから始めてずっと正義連水曜デモ付近で反対運動をしていた私たちはついに少女像を占拠した。

2025년 7월 23일, 1인시위부터 시작해서 줄곧 정의연 수요시위 행사장 근처에서 반대운동을 하던 우리는 드디어 소녀상을 차지하였다.



慰安婦運動の動力を失った正義連は、少女像の場所まで私たちから奪われ、ますます士気が低下し、活動が萎縮せざるを得なくなるだろう。

위안부운동의 동력을 상실한 정의연은 소녀상 자리마저 빼앗기면서 점점 사기가 저하되고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横断幕の内容は「日本軍に連れて行かれた慰安婦は1人もいない。正義連は嘘をつきな！」慰安婦詐欺劇の象徴、「凶物少女像撤去」

횡단막 내용은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는 단1명도 없다. 정의연은 거짓말하지 마라.’와 위안부사기극의 상징, 홍물소녀상 철거’이다.



もはや少女像の撤去は時間の問題と見られる。しかし、このような外的活動よりさらに深刻な問題は学校教育だ。 이제 소녀상 철거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외적 활동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 교육이다.

学校教育

教科書での記述

しかし、これはすべて嘘だ。学校で教科書で子どもたちに嘘を教え、反日感情を助長し、対日敵愾心を育てている。子供に隣人を憎むように教えるのは罪である。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다. 학교에서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며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대일 적개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이웃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죄악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가리킨다.

일제는 1931년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여성들을 전쟁터로 강제로 끌고 가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 일제는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거나 군부 내역을 분명히 알리지 않은 모집 광고를 내기도 했고, 협박과 폭력, 납치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

同ページの下段には水曜子と少女像に対する説明がある。いずれも「慰安婦」の実体を歪曲した虚偽の記述だ。

같은 페이지 하단에는 수요시위와 소녀상에 대한 설명이 있다. 모두 위안부의 실체를 왜곡한 허위 서술이다.



今回は高校の教科書です。「韓国人を戦争に連れて行く」という単元には、次のような慰安婦に対する記述がある。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이다. '한국인을 전쟁에 끌고 가다'라는 단원에는 다음과 같은 위안부 서술이 있다.

한국인을 전쟁에 끌고 가다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병력이 부족해지자 한국인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1938년에 지원병제를 실시하였으며, 아시안-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1943년에는 학도 지원병제를 시행하여 학생도 군인으로 끌고 갔다. 일제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거발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화유, 강압으로 한국인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수많은 한국인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일제는 군인뿐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9년에 국민 징용령을 실시하여 한국인들을 끌고가 공장, 탄광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였으며, 19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여 여성의 노동력도 수탈하였다. 동아

한편 일제는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의 청령거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삶을 강요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숨기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日帝は軍人だけでなく戦争に必要な労働力も強制的に動員した。1939年に国民徴用令を実施し韓国人を連れて行き工場、炭鉱などで強制的に仕事をさせ、1944年には女性挺身勤労令を発表し女性労働力も収奪した。

한국인을 전쟁에 끌고 가다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병력이 부족해지자 한국인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1938년에 지원병제를 실시하였으며, 아시안-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1943년에는 학도 지원병제를 시행하여 학생도 군인으로 끌고 갔다. 일제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거발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화유, 강압으로 한국인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수많은 한국인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일제는 군인뿐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9년에 국민 징용령을 실시하여 한국인들을 끌고가 공장, 탄광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였으며, 19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여 여성의 노동력도 수탈하였다. 동아

한편 일제는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의 청령거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삶을 강요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숨기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一方、日帝は韓国をはじめとする植民地と占領地の女性たちを日本軍慰安婦として強制動員した。被害者たちは拷問、性暴力など恐ろしい生活を強要された。彼らの一部は、反人道的犯罪を隠そうとする日本軍に虐殺されたりもした。

한국인을 전쟁에 끌고 가다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병력이 부족해지자 한국인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1938년에 **지원병제**를 실시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1943년에는 **학도 지원병제**를 시행하여 학생도 군인으로 끌고 갔다. 일제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발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학도 지원병제**를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수많은 한국인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일제는 군인뿐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9년에 **국민 징용령**을 실시하여 한국인들을 끌고가 공장, 탄광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였으며, 19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여 여성의 노동력도 수탈하였다. **동아**

한편 일제는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의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삶을 강요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숨기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この教科書は慰安婦問題をこのように大きく取り扱った。いずれも歴史的事実と異なる嘘だ。
이 교과서는 위안부문제를 이처럼 비중 있게 다뤘다. 모두 역사적 사실과 다른 거짓이다.



学校教育-教科書記述

このように小学校や高校の教科書はいずれも慰安婦問題を扱っている。問題は、教科書の記述内容がすべて「慰安婦」の実体を歪曲した偽りの情報だという点だ。このように、慰安婦問題を教科書に載せて教えることは、次のような深刻な問題を抱えている。

이처럼 소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위안부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는 교과서 서술 내용이 모두 위안부의 실체를 왜곡한 거짓 정보라는 점이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学校教育-教科書記述

1. 慰安婦は基本的に売春女性であるため、未成年の学生に教える内容ではない。
2. 慰安婦は営業許可を得て金銭を稼いだ職業人であるため、日本軍を加害者に設定したことは嘘である。
3. 慰安婦の実体を教えることは成人の領域問題であり、日本軍を加害者と教えること自体偽りであって、いずれも非教育的である。

1.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성매매여성이기 때문에 미성년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아니다.
2. 위안부는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인이기 때문에 일본군을 가해자로 설정한 것은 거짓이다.
- 3.위안부의 실체를 가르치면 성인 영역이어서, 일본군을 가해자로 가르치면 거짓이어서 모두 비교육적이다.

学校教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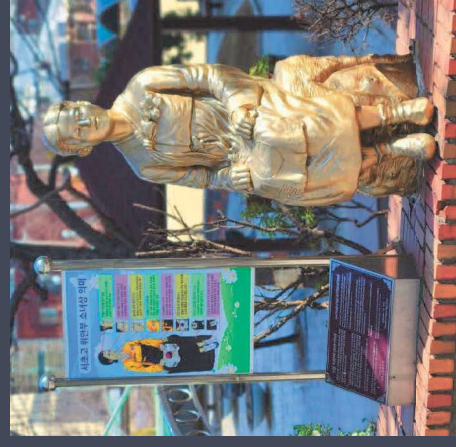
少女像設置

校内少女像設置



ソウルで校内に少女像を設置した学校は、城東区の舞鶴女子高校と瑞草区の瑞草高校がある。もちろん、釜山のハンオル高校にもこの二つの学校の少女像と同じ造形物が設置されている。서울에서 교내에 소녀상을 설치한 학교는 성동구의 무학여고와 서초구의 서초고가 있다. 물론 부산한일고에도 이 두 학교의 소녀상과 동일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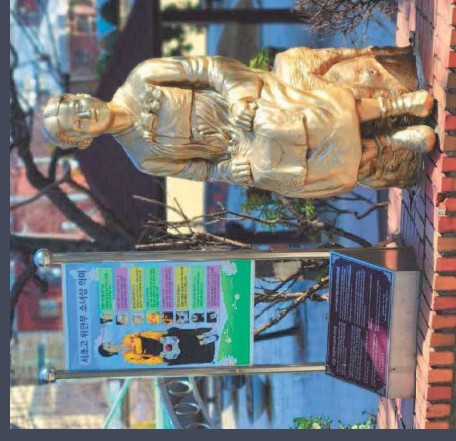
校内少女像設置



2013年、瑞草高校に校長として赴任した伊某氏がデザインし、著作権登録までしたプラスチック素材の造形物だ。日本大使館前に設置した少女像と同様に製作したが、著作権問題の故、再度製作したものである。

2013년 서초고에 교장으로 부임한 이모씨가 디자인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한 플라스틱 소재의 조형물이다.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과 동일하게 제작하였으나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시 제작한 것이다.

校内少女像設置



2017年、舞鶴女子高校に転勤した伊校長は、同じ少女像を建てた。この少女像の建立には城東区片長の積極的な支援もあった。この学校は水曜日は校内水曜デモも数回行った経緯がある。

2017년 무학여고로 전근한 이 교장은 동일한 소녀상을 세웠다. 이 소녀상 건립에는 성동구청장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다. 이 학교는 수요일이면 교내 수요시위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校内少女像設置



53

釜山ハンオル高にも同じ造形物が設置されたが、少女像ではなくおばあさん像だという。ところが、設置動機が非常に不純だ。
부산한얼고에도 동일한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나, 소녀상이 아닌 할머니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설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校内少女像設置



54

同校の申某校長は2014年、教学社の教科書採択で「親日派」論議に巻き込まれると、これを突破するためにこの造形物を設置した。自分は決して親日派ではないという点を知らせるための苦肉の策として、お婆さんの像を建てたということだ。

이 학교 신모 교장은 2014년 교과사 교과서 채택으로 친일파 논란에 휘말리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이 조형물을 설치했다. 자신은 결코 친일파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교육자책으로 할머니상을 세웠다는 것이다.

校内少女像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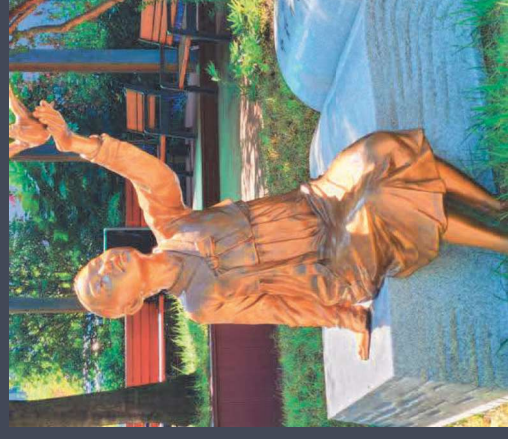


55

この他にも全国的に校内に少女像が設置された学校は大邱女子商業高校、馬山舞鶴女子高校、天安女子商業高校、春川女子高校、咸安女子中学校、木浦マリア会高校、楊平高校、晋州女子高校などがあり、小さな少女像を設置した学校は数百校になる。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교내에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는 대구여상, 마산무학여고, 천안목천고, 춘천여고, 함양여중, 목포마리아회고, 양평고, 진주여고 등이 있으며 작은 소녀상을 설치한 학교는 수백 곳이 된다.

教育機関少女像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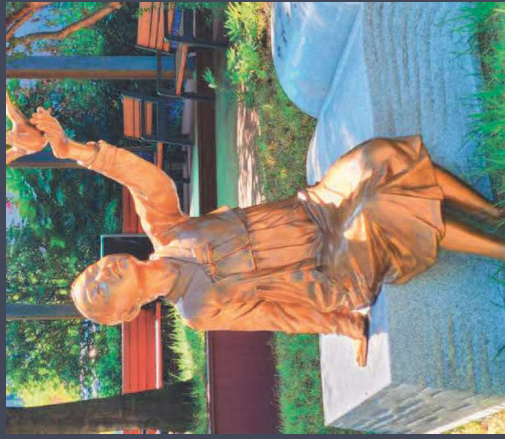
56

その一方で、地方の教育政策を企画し執行する教育監が主導的に少女像の建立に乗り出したところもある。慶尚南道教育庁の朴某教育監だ。

그런가 하면 지방의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소녀상 건립에 나선 곳도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박모 교육감이다.

教育機関少女像設置

57



朴某教育監は2018年6月、慶南教育庁第2庁舎前に本の上に座っている少女像を設置した。子供たちが勉強する本の上に売春女性が座っている姿はあまりにもおかしい。

박모 교육감은 2018년 6월, 경남교육청 제2청사 앞에 책 위에 앉아 있는 소녀상을 설치하였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 위에 매춘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은 너무나 이상하다.

教育機関少女像設置

58



朴某教育監は2021年3月、慶南教育庁晋州教育支援庁前にも少女像を建てた。形は違いが、日本軍に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性的虐待を受けた少女を称えるという建設趣旨は同じである。

박모 교육감은 2021년 3월, 경남교육청 진주교육지원청 앞에도 소녀상을 세웠다. 형태는 다르지만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적 학대를 당한 소녀를 기린다는 건립취지는 동일하다.

教育機関少女像設置

59



そして2024年8月14日、慶尚南道梁山市の梁山図書館の裏に少女像を建立した。この敷地は慶尚南道教育庁所有の公共敷地で、現職教育監が慰安婦運動民間団体に提供した。

그리고 2024년 8월 14일 경남 양산시 양산도서관 뒤에 소녀상을 건립하였다. 이 부지는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의 공공부지로 현직 교육감이 위안부운동 민간 단체에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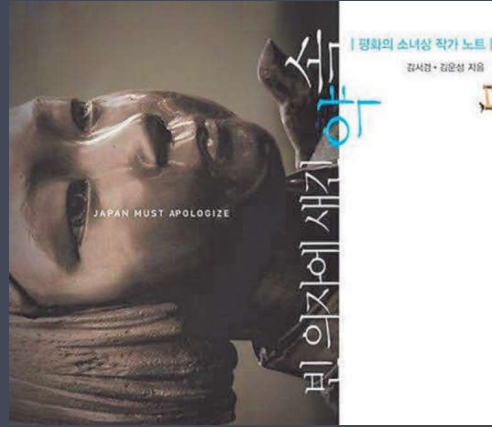
教育機関少女像設置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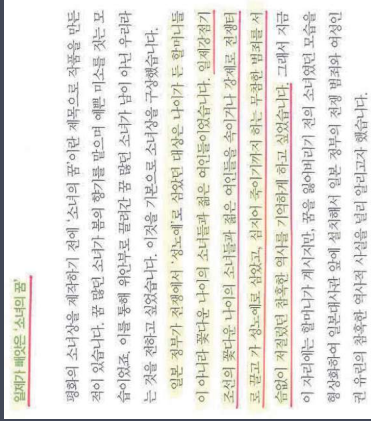
この少女像建立のために文在寅、元大統領は500万ウォンを支援し、朴某教育監は少女像を設置できるよう公共敷地を提供した。社会指導層の人物と教育者が慰安婦詐欺欺劇に付和雷同したのである。

이 소녀상 건립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박모 교육감은 소녀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부지를 제공했다. 사회지도층 인사와 교육자가 위안부사극에 부화뇌동한 것이다.



このように教科書と教育現場に入り込んだ少女像は、実状、歪曲捏造された情報を土台に製作されたのである。この少女像を初めて製作した彫刻家は少女像作家ノートに「空いた椅子に刻んだ約束」という製作動機を書いたのである。

이처럼 교과서와 교육현장에 파고든 소녀상은 실상, 왜곡 날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 소녀상을 최초로 제작한 조각가는 소녀상 작가노트 '빈 의자에 새긴 약속'에 제작 동기를 적어 놓았다.



日帝が奪った少女の夢。「日帝による植民地時代、朝鮮の花のような年頃の少女たちと若い女性たちを騙したり、強制的に戦場に連れて行き、性奴隷にし、さらには殺すという無惨な犯罪を躊躇なく犯した残酷な歴史を思い出させたいと思います。」

일제가 빼앗은 소녀의 꿈.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しかし、これはすべて嘘だ。慰安婦は、抱え主と契約を結んで営業許可を得てお金を稼いだ職業人だった。日本軍に詐欺にあったり、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たケースはありえない。もちろん、日本軍に殺害されたケースもない。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다.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을 맺고 영업허가를 얻어서 돈을 번 직업인이었다. 일본군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례가 있을 수 없다. 물론 일 본군에게 살해당한 경우도 없다.



このような嘘で製作された少女像を教科書に載せて直接学校や教育機関の周辺に設置し、生徒たちに隣人に対する憎悪心を植え付けるのは教育ではなく犯罪である。

이런 거짓말로 제작된 소녀상을 교과서에 실고 직접 학교나 교육기관 주변에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이웃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이다.

少女像撤去要求集会- 2025. 10. 29. 69

【第313回】慰安婦詐欺中断を促す集会
 2025. 10. 31.(金) 10:00~12:00 梁山市 勿幕邑 梁山慰安像前



図書館・幼稚園・小学校の前に売春婦の像を立てておいて
 梁山 梁山市 勿幕邑 梁山慰安像前

売春
早期教育するのか？
 慰安婦詐欺劇の象徴、凶物売春婦像を撤去せよ！

後援 PayPal : cleanm2000@gmail.com

同じことが慶尚南道梁山(キョンサンナムド・ヤンサン)でも起きた。ここは図書館、幼稚園、小学校が囲まれているところで、その中心にある少女像の撤去を要求するために集会申告を終えたのだが、

같은 일은 경남 양산에서도 일어났다. 이곳 은 도서관, 유치원, 소학교가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그 중심에 있는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마쳤다.

少女像撤去要求集会- 2025. 10. 31. 70



集会をするために現場に到着すると、警察車両が完全封鎖して接近さえ難しかった。すべてが違法な公権力の行使だった。

하지만 집회를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니 경찰 차량이 완전 봉쇄해서 접근조차 어려웠다. 모두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少女像撤去要求集会- 2025. 10. 31. 71



集会禁止の理由は学習権の侵害だとしたが、実状は少女像撤去要求を絶対に容認できないためだと思われる。

학습권 침해를 집회 금지의 이유라고 하였으나 실상은 소녀상 철거 요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少女像撤去要求集会- 2025. 10. 31. 72



しかし、ソウルと梁山で連続して集会が封鎖される過程が各種マスコミに報道され、私たちの活動は実際の集会をするよりもはるかに大きな広報効果を得たと自評している。

그러나 서울과 양산에서 연속으로 집회가 봉쇄되는 과정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들의 활동은 실제 집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홍보 효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

今後の解決策

今後の解決策

慰安婦は管轄官庁の許可を得て性的サービスを提供し、お金を稼いだ職業人、つまり売春女性でした。このような慰安婦は国内にもあり、国外にもあり、日本軍が占領した戦線にもありました。特に戦線で日本軍の管理、監督の下で日本軍を相手に売春営業を行った慰安婦が日本軍慰安婦でした。慰安婦は管轄官庁の許可を得て性的サービスを提供し、お金を稼いだ職業人、つまり売春女性でした。このような慰安婦は国内にもあり、国外にもあり、日本軍が占領した戦線にもありました。特に戦線で日本軍の管理、監督の下で日本軍を相手に売春営業を行った慰安婦が日本軍慰安婦でした。慰安婦は管轄官庁の許可を得て性的サービスを提供し、お金を稼いだ職業人、つまり売春女性でした。このような慰安婦は国内にもあり、国外にもあり、日本軍が占領した戦線にもありました。特に戦線で日本軍の管理、監督の下で日本軍を相手に売春営業を行った慰安婦が日本軍慰安婦でした。

74



今後の解決策

日本軍慰安婦になるためには管轄警察署に出頭して身分証明書を発行してもらわなければ出国できませんでした。現地に到着してからは戸籍謄本、印鑑証明書、親権者承諾書、慰安婦許可願書、慰安婦個人調査書、写真2枚を提出し、営業許可を得なければなりません。誰でも強制的に連れて行って、慰安婦をさせるような仕組みではなかったのです。

日本軍慰安婦になるためには管轄警察署に出頭して身分証明書を発行してもらわなければ出国できませんでした。現地に到着してからは戸籍謄本、印鑑証明書、親権者承諾書、慰安婦許可願書、慰安婦個人調査書、写真2枚を提出し、営業許可を得なければなりません。誰でも強制的に連れて行って、慰安婦をさせるような仕組みではなかったのです。

75



今後の解決策

一方、韓国の「慰安婦被害者法」に定義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は、「日帝によって強制的に動員され性的虐待を受け、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要された被害者をいう」(第2条1号)としました。この時、日帝を正義連と女性家族部は「日本軍」と明示し、「強制動員」は就職詐欺、誘引/誘拐拉致の方式で引っ張っていくことだと言いました。

韓国の「慰安婦被害者法」に定義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は、「日帝によって強制的に動員され性的虐待を受け、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要された被害者をいう」(第2条1号)としました。この時、日帝を正義連と女性家族部は「日本軍」と明示し、「強制動員」は就職詐欺、誘引/誘拐拉致の方式で引っ張っていくことだと言いました。

76



今後の解決策

したがっ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なるためには「日本軍によって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た」という前提条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女性家族部に登録された240人のいわゆ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うち、日本軍に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た慰安婦は1人もいません。35年間続いていた慰安婦問題がすべて嘘であり、詐欺である理由です。

따라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는 단1명도 없습니다. 35년째 이어져온 위안부문제가 모두 거짓이고 사기인 이유입니다.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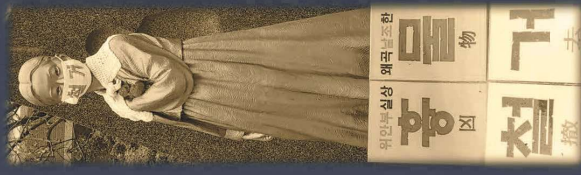


今後の解決策

問題はこうした嘘が国内に限らず、米議会、欧州議会、国連にまで飛び火し、国際的なイシューになり、国際詐欺劇になったという点です。例えるなら、小さな風船がコントロールしにくい大型の熱気球に変わってしまったのです。

문제는 이러한 거짓말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미의회, 유럽의회, 유엔에까지 비화되어 국제적 이슈가 되고 국제사기극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 조그마한 풍선이 제어하기 힘든 대형 열기구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78



24

今後の解決策

では、この慰安婦問題を解決できる方法は何か？ それは火(熱)を遮断すれば大型熱気球がこれ以上浮いていられないのと同じように慰安婦詐欺劇の核心である「日本軍による強制動員説」を遮断したり除去することです。

그렇다면 이 위안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열)을 차단하면 대형 열기구가 더 이상 떠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안부사기극의 핵심인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80

今後の解決策



横断幕には「慰安婦問題は正義記憶連帯と女性家族部の国際詐欺!、私の言葉が間違っていたら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中で日本軍に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た慰安婦をたった1人だけ提示して私を告訴せよ!」とある。

79



今後の解決策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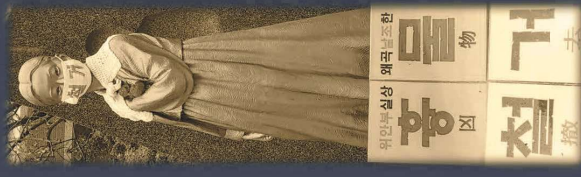
そして“慰安婦詐欺欺国政調査を実施せよ”というピ켓を手に持っています。

今後の解決策

このように私たちは正義連と女性家族部に持続的に「日本軍に連れて行かれた慰安婦」を出すよう要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日本軍に連れて行かれた慰安婦」がなければ、慰安婦被害者法も、日本軍慰安婦被害者も成立することができなからです。正義連と女性家族部はこの要求に必ず答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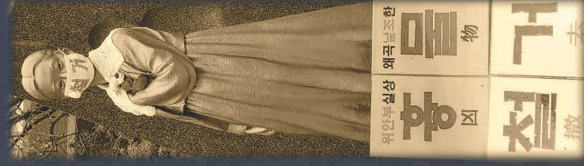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는 정의연과 여가부에 지속적으로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가 없다면 위안부피해자법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연과 여가부는 이 요구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82



25

今後の解決策



嘘で成し遂げられる平和はありません。嘘は葛藤と対立を生むだけです。35年間続いていた慰安婦詐欺欺劇が終息すれば、堅固で恒久的な韓日友好関係が成立するでしょう。その時まで、私たち皆が力を合わせて慰安婦詐欺欺勢力を必ず終息させましょう。

거짓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거짓은 갈등과 대립을 낳을 뿐입니다. 35년간 이어져온 위안부사기극이 종식될 때 굳건하고 항구적인 한일 우호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위안부사기 세력을 반드시 종식시킵시다.

83

ご静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84

「李在明政権が揺さぶる日韓関係 ～日本統治時代をめぐる真実～」



呉 善花

評論家・東京国際大学教授

プロフィール

1956 年、韓国、済州島生まれ。4 年間志願で女子軍隊生活をする。1983 年来日、大東文化大学（英語学）留学生となる。その後、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修士課程（アメリカ地域研究）修了。拓殖大学教授を退職後、2022 年度から東京国際大学教授。著書に『スカートの風』正・続・新（三交社・角川文庫）、『日本の曖昧力』（PHP 研究所）、『私はいかにして日本信徒となったか』（ワック出版）、近著として『反目する日本人と韓国人』（ビジネス社）2021 年、『謙虚で美しい日本語のヒミツ』（ビジネス社）2022 年など著書多数。

李在明政権が揺さぶる日韓関係 —— 日本統治時代をめぐる真実 ——

2025・11・27

呉 善花（オ ソンファ）

1. 李在明政権と日韓関係

- ・ 右派 —— 親日、反中国、反北
- ・ 左派 —— 新中国、親北、反日
- ・ 李在明の本音とは？
- ・ 未来志向 —— 日本重視 —— 「実用外交」
- ・ 「尊敬する朴クネ大統領」「全く違う」との発言
- ・ 閣僚の殆どが親北朝鮮、親中国
- ・ 「日本は韓国を武力支配」
- ・ 「戦後の韓国は、親日勢力の米占領軍と合作」
- ・ 謝罪とは“もう謝らなくていい”と言われるまで続けるべき
—— 謝罪の誠意とは“相手が納得するまで”続けるべき
- ・ 「過去の歴史問題が解決されない限り、未来志向の日韓関係は成り立たない」

2. 新政権の経済政策=社会主義

- ・ 朴チョンヒが作った財閥が国を支配 —— 財閥解体
- ・ 「格差のない平等な社会の実現」
『独立すれば三代が滅び、親日すれば三代が栄える』
—— この言葉は、完全に葬り去らねばなりません
- ・ 「過去の問題が存在は事実 —— 経済、安全保障、技術、文化には、日韓双方が
共に利益を得られる余地がある」
- ・ 「反日は維持し、経済協力などの実利は追求」
—— 二重外交の延長線上

日本統治時代の朝鮮

1.戦後韓国の反日教育

韓国では小学校から反日教育が行われる反日教育の主なパターン3つ

高度な文化・文明は、古代（高句麗・新羅・百済）は朝鮮半島から日本へ

- ・中世、豊臣秀吉による朝鮮侵略で苦しめられた。
- ・近世、36年間日本統治下で苦しめられた。

2.朝鮮統治政策

収奪によって内地（日本）を潤す政策をとらなかった。

- ① 武力的な圧力で統治政策をとらなかった
- ② 文化、社会、教育の近代化を強力に推し進めた。

3.朝鮮土地調査事業——1910年9月～1918年11月

- ・総経費2456万円を投じる
- ・近代的な土地調査
——鉄道施設などのインフラ整備——農地拡張推進

4.巨額投資による産業経済発展

- ・米の生産が飛躍的に伸張。
橋、航路、港、電信、ダム、灌漑など全土に展開
- ・毎年1人当たりのGDP(1920～30年代)
——平均4%上昇
——世界は2%の成長率

5.人口増

- ・農地改革——初期の米量は1000万石
——1940年 2200万石
- ・朝鮮人口——1910年(併合時)：1312万人
1944年：2512万人（2倍）

6. 学校数の急増と識字率急伸

- ・ 義務教育制度 —— 国民学校

併合時 : 100校

1943年 : 5960校

- ・ 識字率 —— 1910年 —— 6%

1943年 —— 22%

- ・ 日本語、朝鮮語（ハングル）、算数、日本史、朝鮮史

7. 朝鮮人の軍志願率

—— 昭和13年 7.7倍

—— 昭和18年 48.2倍

	〈採用数〉	〈応募数〉	〈倍率〉
昭和13年	406	2,946	7.7
昭和14年	613	12,348	20.1
昭和15年	3,060	84,443	27.6
昭和16年	3,208	144,743	45.1
昭和17年	4,077	254,273	62.4
昭和18年	6,300	303,394	48.2

Ⅱ

国際歴史論戦研究所

論説集

韓国は漢字の復活を

2024 年 4 月

国際歴史論戦研究所 ゲスト・フェロー
宮本富士子

韓国語と日本語の近似性

韓国語の勉強をし始めた当時、「韓国語と日本語は文法から言葉の発音までなぜこんなに類似しているのだろうか」と不思議に思った。

私が日本人であって日本の教育を受け、日本文化のなかで生きてきた土台のうえで韓国語、つまりいわゆるハングル語を学ぶということは、ある意味で漢字を自然に学び習得した基盤があるので容易で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る。というのも韓国には日本の熟語漢字の単語がほぼ残っていて、それが現在は表音文字のハングルに置き換えられているのであるが、ハングルの発音の規則を覚えると直ぐ頭のなかで漢字の熟語に置き換えられる。

漢字は中国で作られ朝鮮半島を通して仏教伝来とともに日本に伝えられたとして、韓国人は「漢字は私たちが日本に教えてやった」という観念を一般的に持っているが、明治の時代、日本人が、英語から多くの場合二字熟語として作ったものが、逆に 36 年間の日韓併合時代を通して朝鮮半島に、そのまま伝わり定着しているのだ。

例えば「学校(학교)」「社会(사회)」「薬局(약국)」「経済(경제)」「計画(계획)」「野球(야구)」ほとんどが日本人が作った言葉だが、そのことを韓国人もほとんど知らない。

現在の韓国語表記における漢字使用の廃止が、この漢字表記が現在の韓国語の表記で問題になっているのだ。現在の韓国語では、漢字によってできた単語を全てハングル表記でし、漢字表記はしないのだ。そのことについての不便さを感じたのは私が私の子供たちの学校の教科書を見た時だ。ハングルは表音文字なので日本式に言えば全てひらがなで書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

ハングルでの表記は発音においては英語を初めとする外国語のほとんどの発音が可能と言われるように非常に優れている点があるが、同音異義語の場合、日本人は漢字を見てその意味を把握できるが、ハングルでは漢字表記がないために前後の文章を見て、その関係で元の漢字で表記していたときの意味を把握しなければならない。

極端な例をあげると「防火」も「放火」も同じ表記の‘방화’なのだ。また日本語の前期、前記、電気、伝記、電機、全期、戦機、戦旗もハングルでは‘전기’という一つの表記で表わすことになる。英語等では、文字は表音文字でも、各単語には、接頭辞や接尾辞、語幹があり表意文字の面もあります。ハングルには音の羅列しかなく表意文字の構造がありません。各単語の概念が聞いてすぐに把握できず、不自然なのだ。

このようにハングルだけだと韓国人は単語の意味をどれだけ正確に深く脳にインプットし、その意味を熟知したうえで使っているのか疑問を感じざるをえない。

例えば医学用語で日本語に「耳鼻咽喉科」という言葉があるが、韓国語ではその単語をハングルで、「이비인후과」と書くが、日本人は漢字を見てその部分が即座に理解できるのに、韓国人の場合は、「이」、「비」、「인」、「후」がそれぞれ何を意味しているのか知っているのだろうかと疑問に思われるのである。

漢字を使用しないことからくる教育上の問題

上記したように息子の中学校の歴史教科書見ると地名なのか人名なのか、それとも別の言葉の単語なのか、子供たちがこれをどこまで正確に理解できているのかと疑問に感じたことを覚えている。中学校の時に漢字だけの時間があるが、漢字の授業は漢字だけを学習し、その他の科目の教科書のなかに漢字は全く組み込まれてないので、その漢字の勉強がどこまで子供たちの脳裏に浸透しているかは全く疑問である。

日本語の個人レッスンで韓国の 50 代 60 代の会社の代表取締役の人に日本語を教えたことがあるが、その人が若いころはまだまだ漢字が新聞のなかにあったので日本語の勉強の時にそれが役に立つと言っていた。しかし今では全ての新聞そしてテレビ番組の中での字幕やインターネット上も漢字は全く使用されておらず、そのことは子供にとっても、学校の教科の学習でも問題になると思われる。

私は現在、個人的に韓国での市民活動をユーチューブで配信している。動画作成のとき、日本語字幕をつける際に地名、大学名等の固有名詞では漢字で表すことが必須であるが、漢字を正しく確認するため韓国のネットで検索しても全く漢字が表記されておらず、ほとんど困ったことがある。ありがたいことに日本のヤフーで検索すると地名や固有名詞がしっかり漢字で明記されているので本当に助かった。

漢字表記の無いことによる思考上の問題

韓国人は元来、理性よりも感情が先に立っている国民性だと言われているが、理性的な対話が成立してこなかったこれまでの日韓の外交関係にも漢字文化の削除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と思われる。

日本統治時代に朝鮮半島でソウル大学を卒業した韓国の 80 代と思われる高齢者たちと戦時ジャーナリストの井上和彦氏と対談した動画を見たことがあるが、その高齢者たちの日本語の流暢なことと尊敬語謙譲語そして語彙力に驚かされたことがある。在日韓国人や現在日本に留学している韓国人は日本文化のなかで漢字を学んでいるので韓国に住んでいる韓国人とは思考力、判断力において大きな差があると感じている。

もちろんハングルの優れた部分もあるので、現在の韓国人の、瞬発力や思考の早さ展開、推進力はとても早いものがあり、行動力も優れエネルギーを発揮する点は本当に感心させられ尊敬できる部分だ。

2019 年 12 月にソウル日本大使館前の慰安婦像撤去の活動を始めたことをきっかけに、私もともに活動をするようになった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で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の代表の金柄憲代表が、なぜここまで堂々とあの反日韓国で嘘を暴き、いかなる迫害のなかでもひるむことなく真実を訴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その行動の速さや分析力はどこからきているのか。それは金柄憲代表が大学で漢文学の専攻をし、漢字の専門家であり、漢字の持つ意味に忠実であることに起因しているからだ、私は思っている。思慮の深さと緻密さは他の韓国人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秀でているのだ。なので一般の韓国人は歪曲された歴史を鵜呑みにしやすいが、金代表は嘘や誤謬をすぐに見つけられるのである。

金代表には 2014 年から始めた国史教科書研究所で学校の教科書が間違いだらけということで、各出版会社に直接何度も電話をし、間違いを指摘し正してきた功績がある。

金柄憲所長曰く、特に韓国の近代史の日本に関する記述は 99%が捏造歪曲だということだ。金柄憲所長率いる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の運動も今年で 5 年目を迎えるが、運動内での豊かな発想と実行力は韓国人という思考と行動の早さの基盤とともに、漢字を知り尽くした緻密な理論哲学と良心という道徳性が合わさって形成されたものだと思っている。

漢字表記の復活を

ゆえにこの漢字文化を削除した韓国はもう一度漢字を学校教育を通し少しずつ復活させ、社会に普及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ちなみに言うが、韓国でハングル専用を実施したのは朴正熙政府の時代であった。朴大統領は 1968 年 5 月内閣に 1973 年を目標としたハングル専用 5 ケ年計画を樹立するように

指示した。以降、朴大統領自身も文書の作成、名牌等も全てハングルに替えた。その年の10月には目標年度を1970年にし、3年前倒しにする等、7項目の強力なハングル専用の指示を出した。漢字の削除、ハングル専用政策の概念は「近代化の流れのなかで表意文字の漢字を前近代的なものとしてとらえ、自国の言語生活を通して漢字を打破するのが啓蒙の一環としてみられたということだ。漢字を一掃することが近代化」と考えたとは驚くべきことである。漢字を一掃したが故に、韓国は歴史のウソに気づく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漢字表記の復活なしには日本と韓国との歴史的かつ国際的な問題の溝は狭まらないであろう。

한국은 한자의 부활을

2024 년 4 월

국제 역사 논전 연구소 게스트 펠로
미야모토후지코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 (類似性)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당시 한국어와 일본어가 문법에서 발음까지 어찌면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많을까 의아(疑訝)했었다. 내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한자(漢字)라는 기반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현재는 표음문자인 한글로 대체되긴 했어도 한글 발음의 규칙을 알고 나면 머릿속에서 쉽게 한자어가 연상(聯想)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가 한반도를 거쳐 불교 전파와 함께 일본에 전해졌다고 알고 있다. 즉 한국인 대부분이 ‘한자는 한국이 일본에 가르쳐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영어 단어를 주로 2자 성어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 36 년간의 한일병합시대에 한반도에 전해져서 정착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가령 ‘학교(學校)’, ‘사회(社會)’, ‘약국(藥局)’, ‘경제(經濟)’, ‘계획(計劃)’, ‘야구(野球)’ 등 익숙한 단어는 대부분 일본이 만든 것인데도 한국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한글 전용 어문정책(語文政策)에 따라 한자어를 모두 한글로만 표기하고 한자는 병기(併記)조차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편을 실감한 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봤을 때였다. 모든 교과서가 한글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의미 파악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국어를 한글로만 쓰는 것은 일본어를 히라가나로만 쓰는 것과 같다. 히라가나로만 써놓으면 일본인조차도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운 것처럼 한글로만 써놓으면 일본인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한글은 영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어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음이의어의 경우 외국인인 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어는 문장 속에 포함된 한자를 보고 그 의미를 금방 파악할 수 있으나 한자가 없는 한국어는 앞뒤 문장을 통해서 한자를 유추해야만 겨우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방화(防火)’와 ‘방화(放火)’는 모두 같은 표기의 ‘방화’로 표기한다. 또, 전기(前期), 전기(前記), 전기(電氣), 전기(傳記), 전기(電機), 전기(全期), 전기(戰旗) 등도 ‘전기’라는 하나의 한글로 표기한다. 영어에서는 비록 표음문자이긴 하나 각 단어에는 접두사나 접미사, 어간이 있고 표의문자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는 소리의 나열밖에 없고 표의문자 구조가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일본인 입장에서는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한자표기가 없이 한글만 사용하는 한국인은 과연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가령 의학용어인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의 경우, 일본인은 한자를 보고 그 뜻을 즉시 이해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한글로 ‘이비인후과’라고만 쓰고 있어서 ‘이’, ‘비’, ‘인’, ‘후’가 각각 무슨 뜻인가를 제대로 아는지 궁금한 것이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교육상의 문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다가 가끔 이것이 지명(地名)인지 인명(人名)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뜻의 단어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중학교 때 한자를 공부하는 수업이 따로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한자는 한자 수업에서만 배울 뿐 다른 과목과 연계되지 않는다. 한자 수업은 수업대로, 다른 교과목은 그것대로 한자 없이 전부 한글로만 표기하기 때문이다.

일본어 개인교습으로 한국의 50대 60대 회사 중역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젊었을 때 신문 속에서 한자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각종 인터넷 신문이나 TV 프로그램 등에서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무(全無)하다.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접할 기회가 사라진 탓에 아이들은 한자를 전혀 모르고, 한자 수업을 하더라도 여타 교과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젠가 언론에서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한글 전용의 어문정책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현재 개인적으로 김병헌 대표가 이끌고 있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활동 영상에 일본어 자막을 붙여 유튜브로 전파하고 있다.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일본어 자막을 달 때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 하는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固有名詞)가 등장하면 진땀을 뺀다. 한자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야후는 한자로 표기된 지명이나 고유명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다.

한글 전용으로 인한 사고상의 문제

한국인은 원래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국민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한일 관계에서도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원활(圓滑)하지 못한 한일 관계도 한자를 쓰지않는 한글전용정책의 영향이 아니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일본통치시대에 한반도에서 서울대를 졸업한 한국의 80 대 노인들과 전시 저널리스트 이노우에 가즈히코 씨가 대담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노인들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 존댓말과 겸양어 사용, 그리고 풍부한 어휘력에 놀란 적이 있다. 이처럼 말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사용하고, 듣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상호 오해의 소지가 줄어든다. 한자의 사용은 그만큼 상호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요소가 사라진 것이 일한간 외교 갈등에 일정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2019 년 12 월 한국에서 시작된 주한국일본국대사관 앞 위안부상 철거 운동을 계기로 국사교과서연구소 김병헌 소장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김소장의 반위안부운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반일 분위기가 팽배한 한국 땅에서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맹렬하게 위안부운동 집단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것은 아마도 김대표가 한문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1945 년 이전에 사용된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또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김소장은 탄탄한 한문 실력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섭렵하고, 당시 신문을 정독하여 위안부운동 단체가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것을 계속 봐 왔기 때문이다.

2014 년부터 한국의 초중고 역사 교과서를 연구해온 김소장은 교과서 출판사와 각종 국책 연구기관에 교과서의 오류와 왜곡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 왔다. 김 소장은 한국 근대사, 특히 한일 관계사는 90% 이상이 왜곡·날조라고 주장하는 연구자이다.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일한간 갈등과 대립을 불식(拂拭)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다행히 김소장의 노력으로 교과서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20 년대 일제가 조선 농민의 쌀을 ‘수탈(收奪)’했다는 서술에서 ‘수탈(收奪)’을 당시 무역용어인 ‘이출(移出)’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수탈’ 이 사라진 것은 오롯이 김소장의 노력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병헌 소장이 이끄는 반위안부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도 5년 전 1인 시위로 시작해서 지금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 자리를 차지하며 위안부사기극의 종식(終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괄목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위안부 관련 문서나 자료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한문 실력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자표기의 부활을

한글전용 어문정책으로 한자가 사라진 한국에서는 지근(至近)의 문서나 신문조차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한자 사용을 폐지한 한국이 다시 한자 교육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한국에서 한글 전용을 실시한 시기는 박정희 정부 때였다. 박 대통령은 1968년 5월 내각에 1973년을 목표로 한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박 대통령 스스로 문서나 명패 등을 모두 한글로 바꿨다. 그해 10월에는 목표연도를 1970년으로 3년 앞당기는 등 7개 항목의 강력한 한글 전용 지시를 내렸다. 한글 전용 정책의 명분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표의문자인 한자를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언어생활을 통해서 한자를 타파하는 것이 계몽의 일환」으로서 보여졌다는 것이다. 한자를 일소하는 것이 근대화라고 생각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한자를 폐지하니 문서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왜곡 날조된 역사로 이웃 나라를 공격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한자 부활이야말로 일본과 한국이 갈등의 골을 메우고 미래지향적 우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韓国の憲法はどのように改正したらよいか

2025 年 6 月

国際歴史論戦研究所 会長
杉原誠四郎

今回の政争は韓国の現行憲法の欠陥に基いて起こった

2025 年 6 月 3 日に行われた韓国大統領選挙では、大方の予想どおり、共に民主党の李在明が当選し、翌日韓国大統領に就任した。

思うに端的に言って、2024 年 12 月 3 日に尹錫悦前大統領の戒厳令を宣布したことによって端を発した今回の政治騒動は、偏に、現行の「大韓民国憲法」の欠陥に基づくものだった。

4 日、国会で戒厳令解除を要求する決議がなされ、尹大統領は直ちに戒厳令の解除を行ったが、その後 14 日、国会で弾劾訴追の決議が行われた。もしこの弾劾訴追が、日本の「日本国憲法」における不信任決議と同じようなもので、大統領側に国会の解散権があって、国会を解散させ、そのうえで総選挙が行われ、そして新しく選ばれた国会議員によって大統領として信任されれば大統領を続けるし、再度不信任が突きつけられれば大統領として失職するという制度であれば、今回の政争は、国民の意思によって整然と解決していたはずである。

このように見れば現行憲法には奇妙な規定がある。韓国の現行憲法にはいわゆる人権規定などでは進んでいると見える規定も多々あるが、例えば、第 84 条に大統領の内乱罪、外患罪の規定がある。大統領に、第 76 条で内乱と外患に対して緊急命令を発し、第 77 条では国家非常事態に対して戒厳令を宣布する権限を与えているとすれば、何ゆえに内乱罪の規定があるのか。内乱罪とは政権を奪取する目的を持って国内に争乱を起こす罪のことをいうのではないか。政治権力の掌握者であり、緊急命令や戒厳令を発する権限を有する大統領が、どうして内乱罪で追及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今回の戒厳令に発する争乱で、警察が騒乱罪で大統領を取り調べているが、本来、法治主義の原理からしておかしいのではないか。

もともと、この憲法に従って、共に民主党が発議した弾劾訴追案は尹大統領下で 31 回に達する。1987 年この憲法が施行されて 38 年間で、尹大統領以前に発議された回数

18回と比べると、尹大統領の下でいかに弾劾訴追案が発議されたかが分かる。そのため尹大統領が警告のためとして戒厳令を宣告したのは、法的にも政治的にも不適ではあったが、心情的には分かりうるものがある。

司法重視の韓国の現行憲法の誕生

韓国では朴正熙大統領、全斗煥大統領と、軍事政権を経て、1987年6月民主化宣言を行い、1948年7月12日に制定の「大韓民国憲法」以来、9次にわたる改正を経て1987年10月29日、10度目の憲法として現行憲法ができた。そして12月、大統領選を行い盧泰愚大統領が誕生し、以後、今日まで選挙で選ばれた大統領が続いていた。

そのような政治的な歴史のもと、尹大統領が戒厳令を宣告したのであるから、韓国国民がこの戒厳令に賛意を寄せなかったのは当然といえる。

が、この憲法は、軍事政権を警戒しすぎてか、あまりにも司法に頼りすぎ、不適切な憲法であった。法治主義の三権分立の原則を超えてあまりにも司法の采配に頼りすぎ、三権分立の原則から逸脱してしまっていたのだ。本来、国民の政治意思に基づいて政治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を、法の正義、法の正しい解釈を行うことを使命とする司法に頼って解決しようとして、逆に国民の分裂を招いたのだ。

結局、現行憲法のもと、尹錫悦前大統領は昨年12月3日戒厳令を宣布し、14日に国会が弾劾訴追を可決し職務停止となり、4月4日、憲法裁判所が罷免を決定し、そのために6月3日に大統領選挙となった。

他方、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はといえば、公職選挙法違反容疑に対して、大法院（最高裁）は5月1日、無罪を宣告した原審を有罪であるとして破棄したので、李在明は大統領選に出られなくなりかけたが、差し戻された高裁は7日、公判期日を5月15日の大統領選の終わった後の6月18日に延期した。そのことによって李在明新大統領は大統領選に出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そのことによって大統領になることができた。結局、李在明新大統領の誕生も、尹錫悦前大統領の大統領罷免も、国民によって選ばれたわけではない裁判官の手によって決定したことになる。

韓国国民は司法問題を中心に憲法改正を望んでいる

幸いにして、韓国国民は賢明にして、大半が憲法改正を望んでいる。裁判所に対する不信感は強く、司法制度の改革を中心に憲法改正を望んでいる。今回の大統領選で、与党「国民の力」も野党「共に民主党」も憲法改正を政策に掲げているが、国民のこのような意向を受け入れて司法制度の改革を中心に憲法改正に臨んでいただきたい。

そこで司法とは何か。「法の支配」「法治主義」の下における三権分立としての司法の役割は何かを考えておきたい。その究極の役割りは、成文法は成文に従うのは当然であるが不文法にあっても、訴訟を通じて法の最終解释权を行使することにある。そしてその解释权に基づく解釈は同種の案件に対しては実質的に同一の判決を出すものという前提がある。

そうした司法行為は政治ではなく法の解釈であるから、裁判官は選挙によって選ばれるのではなく一定の資格を有する者に委ねられるのである。そして訴訟を通じて同一の案件には同一の判決を下すために、地方裁判所から最高裁判所へと三審制度を取るのである。

司法には成文の最高法規たる憲法に従うが、そのために立法機関が違憲の法律を制定した場合、違憲立法であることを宣し、当該法律の効力を否定する権限が与えられているが、それも原則的には、訴訟による。韓国の現行憲法第 13 条には遡及立法により参政権と財産権は遡及されて剥奪されないとあるが、もしそのような法律が制定されれば、それによって利益を奪われる者が訴訟を起し、その訴訟によってその立法を違憲立法として効力を停止し、憲法及び法律の解釈につき最終解释权を行使していることを明かすのである。

このように見れば、司法は、政治の対極にあるものなのであることが分かる。しかるに現行の韓国憲法は、政治的に解決すべきことにいともたやすく裁判所の判断にゆだねたのである。

司法権とは何かについて、もう一点、「統治行為論」なるものを見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行政を担当する行政府には、たとえ成文法に根拠がなくても、国家の緊急事態において戒厳令ないしそれに類するものを発する権限がある。例えば、韓国で北朝鮮から軍隊が侵入してきた時とか、韓国の領土の大半で地震が起きてそれ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とか、戒厳令を含むこうした命令は出しようとするのが、「法の支配」「法治主義」の下での正しい考え方である。

韓国の現行憲法では、第 76 条で内憂・外患天災・地変等に対して緊急命令を出してよい規定があるし、第 77 条では国家非常事態において戒厳令を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今回の尹錫悦前大統領の昨年 12 月 3 日の戒厳令の宣布は、この条文による合憲行為か、違憲行為かは見解の分かれやすいところだが、厳密に見れば両方に見える。戒厳令を布くに値する状態はなかったことで、その点で実質的に違憲行為と見なされうる。が、国会の不同意によって直ちに戒厳を取消し、12 月 14 日には国会の弾劾訴追の決定によっ

て職務停止に従ったのであるから、形式的には憲法に従って行動したということになる。とすれば政治的に不適切な戒厳宣布であるとしても、それは国会の不承認によって処理されるべきものともいえる。したがって形式的には合憲行為だったとも解釈できるのだ。もっとも、尹前大統領は国会議員も拘束しようとしていたようだから、その点で尹前大統領の戒厳令宣布には違憲行為の部分もあったといえなくはない。

司法の役割を考えると、もうひとつ、「統治行為論」という考え方を取り入れ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成文法に根拠があるなしに関わらず、行政には統治に関して特別な役割があるというのが「統治行為論」の考え方がある。いわれてみれば決して否定できない考え方である。

日本では1959年12月、いわゆる砂川事件という事件の判決に関わって当時の最高裁判所長官で法学者の田中耕太郎が強く唱えたものだ。日本の憲法では文理的に解釈すれば第9条によって「戦力」を持た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が、さらに文理解釈を推し進めれば、それは外国の軍隊を駐留させることも違憲となる。したがって日米安保条約を結んでアメリカの軍隊を駐留させていることも、それは「戦力」を国内に置くことになるから違憲だということになる。このとき田中耕太郎はどのように判示したか。

田中はこの件についての合憲か合憲でないかの判断は司法裁判所の判断になじまないものであるとして、合憲とも違憲とも示さなかった。すなわち国家統治の基本に関する高度に政治性のある国家行為のごときは、それが訴訟となり合憲か合憲でないか判断可能な場合であっても、そうした問題は裁判所の審査権の外にあるとしたのである。

つまりは司法の役割は、訴訟を通じて法の最終解释权を行使するのが役割であるが、それでもまだ政治に関することで司法の判断の外にあるものがある、と判示したのである。司法に関する極めて重要な判断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の現行憲法の場合、1987年6月民主化宣言を行い、民主主義を守ろうとしたのは敬すべきであるが、「法の支配」「法治主義」の下で憲法として司法の役割について、「統治行為論」の場合も含めて不適切な役割を担わせていたのである。つまり簡潔に言えば、国民の意思に基づいて、政治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法の正しい解釈を求める司法に委ねていたのだ。

今回の選挙戦を通じて与党「国民の力」も、現在は与党となった選挙戦中の野党「共に民主党」も憲法改正を政策に掲げている。が、司法の問題を掲げる改正案は少なかった。大統領の5年任期の1期制の規定など、他にも改正すべきところは多数ある。が、韓国憲法の最も誤っているところは国民の意思に基づいて政治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

ろを、司法によって解決しようとしているところだ。そのところを解決しなければ、韓国の政治の安定は生まれてこないであろう。

憲法改正に当たっては「法の支配」「法治主義」の下で法とはどうあらねばならないか。そこから憲法はどうあ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の視点が必要だ。

その観点から見ると、韓国の法秩序、憲法秩序には、さらに、特定事項限定の立法の禁止の原則、遡及禁止の原則に関わる観点が必要だ。

「支配」の名に値する支配とは「法の支配」しかないというときの「法の支配」「法治主義」の下では、特定個人に適用するためだけの立法は許されない。絶えず一般法の建前を守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まして特定個人の不利益になるような立法は「遡及禁止の原則」が厳しく適用さ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つまり、個人の不利益に関わる立法は、立法以降に生じた案件にしか適用できないという「遡及禁止の原則」が守ら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原則が守られていなければ、「法の支配」「法治主義」を崇めている国家とはいえない。韓国にあって、まさに世界をリードする国家として、法に関わる立法、行政、司法の関係者は、このことを厳しく認識し、韓国をして世界で最も優れた近代国家の1つ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の政界の2党構造

韓国の現行憲法第8条には、政党の目的や活動が民主的基本秩序に反すると判断されるとき解散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規定がある。判断するのは憲法裁判所である。韓国の場合、北に共産主義の同胞国家が控えており、それへの警戒が避けられず、親北で共産主義を信奉する政党は許されないことになるから、このような規定が憲法にあるのはいこう仕方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が、その結果、政界の構造にどのような結果が生まれるであろうか。共産主義政党が存在しないという政界構造では、結局、アメリカのように保守と非保守、リベラルと非リベラルというようなわずかな違い有しながらの2大政党制が事実上定着するのではないか。日本でも、戦前、共産党が非合法であったとき、政界は政友会と民政党とが主要2大政党となり、バトルを繰り返し、健全な政党政治を打ち立て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の一つの理由は、共産党が非合法で、共産党的な動きは高等警察など世間で見えないところで弾圧していたので、政界で共産党に対する緊張をする必要がなかったからである。

戦後の日本の政界は、共産党も暴力革命を期さないかぎり、合法であり、多くの政党は共産党との距離で、政権担当能力が問われることになり、その点で共産主義への警戒が日

ごろから政界にあり、結果として1つの保守系の現実路線の自由民主党が長期にわたって政権を担うという結果になっている。

韓国にあっては、結局は2大政党で安定する以外にはないであろう。とすれば政権交代のたびに前政権を罵倒し、政権を担ったものを貶めるのは止めた方がよいであろう。その点で、司法の手助けによって大統領となった李在明は、6月4日の大統領就任演説で「分裂を終わらせる」と言っている。そのためには尹錫悦前大統領の戒厳令を宣布は、I種の憲法行為として許すべきであろう。この通常では考えられない戒厳令宣布が、李在明新大統領にとって敵失であり、オウンゴールであったことも考慮して寛容に対応するのが肝要であろう。大統領在任中は起訴されず裁判は停止するなどの自己に有利な立法は許されてよいが、「法の支配」「法治主義」のもと、許されない立法は進めてはならないであろう。

そして分裂を解消させるための憲法改正に取り組んで欲しい。そのためには大統領の任期が4年任期の大統領制であっても、米国のように、国会の議員の半数が中間選挙で選ばれ、大統領の政治が、たえず国民の意思で調整されるようにしておく必要がある。

日本から見た期待

繰り返すが、李在明新大統領は、6月4日の大統領就任演説で、国内では対立を解消すると言い、そして対国外に向かつては実用的な外交を展開し、日米韓及び日韓の関係を重視すると言った。もしかすれば、本当にこのようになるかもしれない。日本にあって明治維新の時だが、大義の前に、厳しく対立していた薩長による薩長同盟ができたように、李在明大統領は大化けして、韓国の政治史で繰り返されてきた前政権への報復というのを止め、真に偉大な大統領となり、韓国国内の対立を解消する大統領になっているかもしない。本人も5件の刑事事件を抱えている大統領であるが、韓国の国内の対立を解消した偉大な大統領として、次期大統領によってこれらの刑は永遠に不起訴にするという恩赦を受けるようになるかもしれない。

が、李在明大統領の支持基盤には、対日問題で、徴用工、慰安婦問題を持ち出して再び反日カードを切ろうとする勢力がマグマのように存潜在している。何かの拍子にそれが噴出して、再び日韓関係は氷のように凍結してしまうことも予想される。だとしたら、日本としては、李在明政権で、いささかでもその反日カードを切るような兆候が見られたら、直ちに経済や外交の友好関係を凍結し、李在明大統領にそのカードをほんのわずかであっても切らさ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結果としては李在明大統領自身のためにもなることだ。

現在、日韓はともに出生数の減少に苦しんでいるが、世界的にはある意味で、お互いに最先端の国になっているのだ。平均寿命は日本がいちばんで韓国は3番となっている。そのように互いに世界の最先端を行っている国が、さしたる根拠もなく反日政策を取り、反日感情に溺れてしまうのは極めて残念なことである。1910年の日韓併合が韓国の植民地化であったというのは、韓国国民にとって、1つの歴史認識として許されようが、それは日本による一方的搾取ではなかった。第2次世界大戦が終わって、韓国が1つの国家として再生となったとき、韓国には日本統治の下で日本が残したさまざまな制度が残っていた。警察機構も含めて、壮大なる官僚機構が残っていた。今日の近代化し世界の最先端の国になったことを見てみれば、こうした日本統治の正の遺産がどれほど貴重なものであったかということになる。そのことを感情から離れれば容易に客観的に認識できる段階に至っているはずである。

それに戦後の韓国における反日感情は、歴代政府があえて反日教育で育んだ故のところもある。現在の韓国はその反日教育からもたらされた反日感情の部分もあることを認識できる段階に至っている。韓国の名誉としても反日感情からは脱皮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段階に至っている。

現在、韓国は、北朝鮮、中国、ロシアと、核保有の専制国家と対面する関係に地政学上なっている。韓国、日本、米国、そして台湾という民主主義国家は人類普遍の民主主義国家として助け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関係にある。とすれば、もはや反日カードなど持ち出す状況ではない。版一カードを少しでも切り出せば、日本は直ちに友好促進政策を凍結するよう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李在明政権に少しでも反日カードを切る兆候が見えたら、直ちに友好関係を凍結するようにすることは、日本にとっては当然よいことだが、韓国、そして李在明新大統領自身にとってもかけがえのない必要なことであり、よいことなのだ。そして李在明大統領をして韓国の歴史に残る最上の大統領になるのを手助けしていくのだ。

以上のことは決して日本から上から目線で語っているのではない。日本でも司法がおかしくなっている。最高裁も判断能力の劣化が著しく進んでいる。私は日本の司法界にも憂いを抱いており、また「日本国憲法」の改正も望んでいる者である。

한국의 헌법은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까

2025 년 6 월

국제 역사 논전 연구소 회장
스기하라 세이지로

이번 정쟁은 한국의 현행 헌법의 결함에 근거하여 일어났다.

2025년 6월 3일 치러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체적인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당선되어 다음 날 한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생각건대, 단적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서 비롯된 이번 정치소동은 오로지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결함에 근거한 것이다.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계엄령 해제를 단행했고, 이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가 이뤄졌다. 만약 이 탄핵소추가 일본의 일본국 헌법 불신임 결의와 같이 대통령 측에 국회해산권이 있고,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 총선이 치러지고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해 대통령으로 재신임되면 대통령직을 계속하고, 또다시 불신임이 닥치면 대통령으로서 실직하는 제도라면 이번 정쟁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연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행 헌법에는 기묘한 규정이 있다. 한국의 현행 헌법에는 이른바 인권 규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84조에 대통령의 내란죄와 외환죄 규정이 있다. 대통령에게 76조에서 내란과 외환에 대해 긴급명령을 내리고 77조에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내란죄 규정은 왜 있는가? 내란죄란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국내에 쟁란(爭亂)을 일으키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력의 장악자이자 긴급명령이나 계엄령을 발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왜 내란죄로 추궁당해야 하는가? 이번 계엄령에 발(發)한 쟁란에서 경찰이 소란죄로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지만 본래 법치주의 원리로 생각할 때부터 이상하지 않은가?

원래 이 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 밑에서 31차례에 이른다. 1987년 이 헌법이 시행된 지 38년 만에 윤 대통령 이전에 발의된 횟수 18회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경고 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적당하기는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사법 중시의 한국 현행헌법의 탄생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정권을 거쳐 1987년 6월 민주화 선언을 했고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이후 9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열 번째 헌법으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12월 대선을 치르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했고, 이후 오늘날까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정치적 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으니 한국 국민이 이 계엄령에 찬의(贊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헌법은 군사정권을 너무 경계해서인지 지나치게 사법부에 의존한 부적절한 것이다. 법치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을 넘어 지나치게 사법의 지휘에 의존해 삼권분립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본래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의 정의, 법의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법에 기대어 해결하려다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 현행 헌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고,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해 직무 정지를 당했으며,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6월 3일 대선이 치러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5월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이재명이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됐지만, 재판부는 7일 공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그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탄생도, 윤석열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 파면도 국민에 의해 뽑히지 않은 법관의 손에 의해 결정된 셈이다.

한국 국민은 사법 문제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다행히 한국 국민은 현명하게 대부분 헌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불신은 강하고, 사법 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헌법 개정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에 임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사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지배’, ‘법치주의’ 아래 삼권분립으로서의 사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그 궁극적인 역할은 성문법(成文法)은 성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불문법(不文法)에 있어서도 소송을 통해 법의 최종 해석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해석권에 기초한 해석은 동종의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한 사법행위는 정치가 아니라 법의 해석이므로, 재판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으로 3심 제도를 취하는 것이다.

사법에는 성문의 최고 법규인 헌법에 따르되 이를 위해 입법기관이 위헌법률을 제정할 경우 위헌입법임을 선언하고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소송에 따른다. 한국의 현행 헌법 제13조에는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되어 박탈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면 그로 인하여 이익을 빼앗기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으로 그 입법을 위헌 입법으로서 효력을 정지하고 헌법 및 법률의 해석에 대하여 최종 해석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법은 정치의 대척점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한국 헌법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쉽게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사법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또 한 가지, 통치행위론을 살펴봐야 한다.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에는 비록 성문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의 긴급사태에서 계엄령 내지 그와 유사한 것을 발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북한으로부터 군대가 침투해 왔을 때라든가, 남한 영토 대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나 그에 대처해야 할 때라든가 계엄령을 포함한 이런 명령은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의 지배’, ‘법치주의’ 하에서 옳은 생각이다.

한국 현행 헌법에는 제76조에서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에 대해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제77조에서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이 조문에 따른 합헌 행위인지 위헌 행위인지는 견해가 나뉘지기 쉬운 부분이지만 엄밀히 보면 양쪽 모두로 보인다.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 점에서 실질적으로 위헌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부동의에 따라 즉시 계엄을 취소하고 12월 14일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에 따랐으니 형식적으로는 헌법에 따라 행동한 셈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계엄선포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의 불승인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합헌행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구속하려 했던 것 같으니 그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는

위헌행위 부분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의 역할을 생각할 때, 또 하나 통치행위론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성문법에 근거가 있든 없든 행정에는 통치에 관해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 통치행위론의 시각이다. 듣고 보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일본에서는 1959년 12월 이른바 ‘스나가와 사건’이라는 사건 판결에 연루돼 당시 대법원장이자 법학자인 다나카 고타로가 강력히 주창한 것이다. 일본 헌법에서는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제9조에 따라 ‘전력(戰力)’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리해석을 더 밀어붙이면 그것은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도 위헌이다. 따라서 미일안보조약을 맺고 미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도 그것 역시 전력을 국내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말이 된다. 이때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는 어떻게 판시했는가.

다나카는 이 건에 대한 합헌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법재판소의 판단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 합헌이라고도 위헌이라고도 판시하지 않았다. 즉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로 정치성이 있는 통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소송이 되어 합헌인지 합헌이 아닌지 판단 가능한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는 법원의 심사권 밖에 있다고 한 것이다.

즉 사법의 역할은 소송을 통해 법의 최종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이 역할이지만, 그래도 아직 정치에 관한 것으로 사법의 판단 밖에 있는 것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사법에 관한 지극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해야 한다.

한국 현행 헌법의 경우 1987년 6월 민주화 선언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것은 존중해야 하지만, '법의 지배' '법치주의' 아래의 헌법으로서, 사법의 역할에 대해 - '통치행위론'의 경우도 포함하여 - 부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게 했던 것이다. 즉 간결하게 말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법의 올바른 해석을 요구하는 사법부에 맡긴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현재 여당이 된 선거전(選舉戰) 당시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헌법 개정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법부의 문제를 내세우는 개정안은 적었다. 대통령 5년 임기의 1기제 규정 등 그 밖에도 개정할 것이 많지만 한국 헌법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안정은 나타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법의 지배 = 법치주의 아래에서 법이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거기서부터 헌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법질서, 헌법질서에는 더 나아가 특정 사항 한정 입법 금지의 원칙, 소급 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관점이 필요하다.

‘지배’의 이름값을 하는 지배란 ‘법의 지배’밖에 없다고 할 때의 ‘법의 지배’, ‘법치주의’ 아래서는 특정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입법만 허용할 수 없다. 끊임없이 일반법의 명분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하물며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입법은 소급 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의 불이익에 관련된 입법은 입법 이후에 생긴 안전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소급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의 지배 =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한국에게 있어서 바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법에 관련된 입법, 행정, 사법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근대국가 중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 정계의 양당 구조

한국의 현행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해산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 판단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이다. 남한의 경우 북에 공산주의 동포 국가가 있어서 그에 대한 경계가 불가피하고, 친북으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니 이런 규정이 헌법에 있는 것은 일단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 정치권의 구조에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공산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권 구조에서는 결국 미국처럼 보수와 비보수, 리버럴과 비자유주의 같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양대 정당제가 사실상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에서도 전쟁 전 공산당이 비합법적일 때는, 정치권은 정우회와 민정당이 주요 양대 정당이 돼 싸움을 거듭하면서 건전한 정당정치를 내세우지 못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공산당이 비합법적이고, 공산당적인 움직임은 고등경찰 등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산당에 대해 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후의 일본 정계는 공산당도 폭력혁명을 기하지 않는 한 합법이며, 많은 정당은 공산당과의 거리에서 정권 담당 능력이 따져지게 되고,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가 평소 정계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1개 보수계의 현실 노선인 자유민주당이 장기에 걸쳐 정권을 담당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한국은 결국 양대 정당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을 매도하고 상대방이 정권을 잡았던 것을 폄하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6월 4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분열을 끝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일종의 헌법

행위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 통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계엄령 선포가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는 적실이자 자책골이었음을 감안해 관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통령 재임중에는 기소되지 않고, 재판은 정지하는 등, 자기에게 유리한 입법은 허용되지만 법의 지배 = 법치주의 아래 허용되지 않는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4년 임기인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미국처럼 국회의원의 절반이 중간선거로 선출돼 대통령의 정치가 반드시 국민의 뜻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본 기대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6월 4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내에서는 대립을 해소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국외를 향해서는 실용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한미일 및 한일 관계를 중시하겠다고 했다. 어쩌면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메이지유신 때지만 대의 앞에서 그간 팽팽히 맞서던 사쓰나가 동맹이 생겼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혼란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되풀이돼 온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을 멈추고 진정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한국 국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본인도 5건의 형사사건을 안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한국의 국내 갈등을 해소한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차기 대통령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형들은 영원히 불기소하는 사면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는 대일 문제로 징용공,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와 다시 반일 카드를 자르려는 세력이 마그마처럼 잠재해 있다. 어떤 장단에 그것이 분출되어 다시 한일관계는 얼음처럼 동결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된다. 그렇다면 일본으로서는 이재명 정권이 조금이라도 그 반일 카드를 굽을 조짐이 보이면 즉각 경제 외교 우호관계를 동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카드를 아주 조금이라도 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현재 한일은 모두 출생수 감소에 시달리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최첨단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은 일본이 최고이고 한국은 3번이다. 그렇게 서로 세계의 최첨단을 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근거도 없이 반일정책을 펴면서 반일감정에 빠져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1910년 한일합방이 한국의 식민지화였다는 것은 한국 국민에게 하나의 역사인식으로 허용되었지만 그것은 일본에 의한 일방적 착취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하나의 국가로 재생되었을 때 한국에는 일제 치하에서 일본이 남긴 여러 가지 제도가 남아 있었다. 경찰기구도 포함해 웅장한 관료기구가 남아 있었다. 오늘날 근대화되어 세계의 최첨단 국가가 된 것을 보면, 이러한 일본 통치의 정(正)의 유산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 하게 된다. 그 사실을 감정에서 벗어나면 쉽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게다가 전후 한국의 반일 감정은 역대 정부가 굳이 반일 교육으로 키운 까닭도 있다. 현재의 한국은 그 반일교육에서 초래된 반일감정의 부분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의 명예로서라는 점에서도 반일감정에서는 탈피해 나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핵보유 전제국가를 대면하는 처지, 지정학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대만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로 도와야 하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반일 카드를 꺼낼 상황이 아니다. 빈일카드를 조금이라도 꺼내면 일본은 즉각 우호촉진정책을 동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일 카드를 꺼낼 조짐이 보이면 즉각 우호관계를 동결하라고 나서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한국, 그리고 이재명 신임 대통령 자신에게도 둘도 없이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국 역사에 남을 최고의 대통령이 되도록 돕는 일이다.

이상의 것은 결코 일본이 위로부터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도 사법이 이상해지고 있다. 대법원도 판단 능력의 열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일본의 사법계에도 근심을 품고 있으며, 또 「일본국 헌법」의 개정도 바라고 있는 자이다.

李在明政権と日韓関係

2025 年 7 月

国際歴史論戦研究所 上席研究員
松木國俊

去る 6 月 3 日、韓国では尹錫悦大統領の罷免に伴う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大方の予想通り「共に民主党」の李在明氏が当選し、政権を掌握した。これから李在明政権はどこに向かうか、そして日本はいかに対応すべきかについて、私の見解を述べてみたい。

李在明独裁政権の誕生

まず確実なことは、韓国においてすべての権力が大統領に集中することだ。行政府は当然ながら大統領自身が直接取り仕切る。首相以下の閣僚、情報機関である国家情報院のトップもすでに側近で固めた。

立法府については、与党である「共に民主党」が国会議員の絶対多数を占めており、大統領が提示する法案や予算案、さらに人事案もすべてフリーパスだ。

司法面ではどうだろう。最高裁判所に相当する大法院の長官は大統領が指名し、国会の承認を得て就任する。現在の長官は保守系だが 2 年後の 2027 年 6 月で任期切れとなり、次の長官は事実上李在明氏が決めることになる。他の裁判官についても、12 人中 9 人が李在明大統領の任期中に任期満了で交代する。大法院の裁判官は大法院長官の推挙により国会の承認を得て大統領が任命するため、後任は政権寄りの人物が占める確率が高い。

次に憲法裁判所であるが、同裁判所は大統領、国会、大法院長官がそれぞれ三人ずつ選出した計九人の裁判官で構成されている。従って 2027 年 6 月の時点で李在明大統領系の大法院長官が就任すれば、ほぼ全員を李在明系の裁判官が占めることになるだろう。

第四の権力といわれるマスコミも状況は同じだ。KBS、MBC 等の公共放送局の理事会メンバーは、政府機関である韓国放送通信委員会（KCC）の推薦を受けて大統領によって任命される。結果的に李在明大統領の意向に沿った人物が理事に選ばれることになり、公共放送は政権の宣伝機関以外の何物でもなくなる。李在明政権はブレーキ不在の独裁的政権となる公算が極めて高い。

反日扇動で国民を糾合

韓国内では高止まりした若年失業率や社会的格差の拡大、世界でも並外れた少子化の進行など、深刻な社会問題が蔓延している。さらに輸出依存型の国家経済が行き詰り、今年第一四半期の経済成長率はマイナス 0.2%に落ち込んでしまった。すべて構造的問題であり、一朝一夕に解決することは出来ない。先行き不透明感が募る中で、国民の不満は必然的に李在明政権に向かうことになる。

韓国内の保守勢力も黙ってはいない。もともと李在明氏には多くの疑惑がある。京畿道知事時代の北朝鮮への不正送金や城南市長時代の都市開発に関わる不正などをめぐり、現時点で 5 件の裁判を抱えている。大統領には「不訴追特権」があるが、訴因が大統領就任前に発生したものに対してもこれを適用出来るかは法的にあいまいであり、これから保守勢力は李在明政権のアキレス腱とも言えるこれらの疑惑を徹底的に追及するはずだ。

先の大統領選挙の得票数を見ても 40%以上が「反李在明票」であり、保守派が勢力を盛り返して次回 2028 年の総選挙で圧勝すれば、国会での李在明大統領の弾劾発議もあり得る。憲法裁判所の人事を押さええていても、「反李在明」の世論が盛り上がり、裁判官がこれに迎合すれば弾劾が成立するだろう。

李在明大統領がそのような「危険性」を回避するためには、世論を手なづけ、次の総選挙でも政権与党に勝利させねばならない。だが現政権が短期間で国民が納得する成果を上げるのは極めて困難である。ならばすでに決着している過去の歴史問題を蒸し返し、反日感情を煽って国民の不満を全て「日本への怒り」へと転化させる以外に手はない。

口先で日韓協調路線を唱えてはいても、李在明氏の本性が「親中・反日」であることは過去の言動を見ても明らかである。選挙公約の中でも李在明氏は「元慰安婦の名誉を回復し、補償を最大限引き出す」と明言しており、「公約の実行」を口実に、2015 年の日韓合意により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した「慰安婦問題」を再び持ち出して、「謝罪と賠償」を日本側に求めてく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反日感情の強い韓国では、日本に強硬に出れば出るほど大統領の人気は上昇する。これで次の総選挙でも与党勝利は間違いないだろう。

そして彼が次に狙うのは、韓国憲法の改正である。韓国憲法では大統領の任期は五年に限られ再選はない。これまで韓国の歴代大統領の多くが退任後に有罪判決を受け、悲惨な末路を迎えている。李在明氏も大統領を退任すればただの人には過ぎない。叩けば埃のでる体であり、いくつもの罪に問われて破滅するのが目に見えている。

それを避ける道は大統領再選しかない。韓国大統領は憲法改正の提案権を握っており、李在明氏が「アメリカと同じように再選可能にしよう」と提案すればおそらく通るはず

だ。彼は自身が築き上げた独裁体制下であらゆる手段を用いて二期目を勝ち取り、最終的に終身大統領への道を開くことさえ考えるかもしれない。

日韓が協力し独裁にストップをかけよう

だがそのような独裁的体制は韓国の「自由と民主主義」に死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立法も司法も政権の手中にあり、反政府的な活動が合法的に弾圧されるようになれば、言論の自由はなくなり、共産主義体制と何ら変わらなくなるのだ。

そればかりではない。李在明政権が突き進むであろう「親中・反日」路線は日米韓の連携を弱体化させ、最悪の場合、韓国は国ごと中国に飲み込まれる恐れさえある。

そうなれば日本は中国という覇権国家と直接対峙せざるを得ず、日本の自主独立が脅かされる事態となる。ならば日韓の国民は協力して李在明独裁体制に何としてもストップをかけなければならない。

李在明氏が韓国民を糾合するために「反日感情」を利用するであろうことはすでに述べた通りである。だがその「反日感情」とは歴史を歪曲した反日教育によって刷り込まれた「逆恨み」(unjustified resentment)に過ぎない。幸い、韓国においても少数ではあるが、このことを指摘する研究者が現れた。元ソウル大学教授である李栄薫氏が執筆・編集した『反日種族主義』は、反日教育における歴史歪曲を具体的に論破しており韓国内で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

反日教育で「性奴隷」と教えられた慰安婦が、実は単なる売春婦だった事実も多く韓国の人々が知るところとなり、各地に建てられている慰安婦像の撤去を求める韓国人による市民運動も拡大している。さらに若い人々の中にはSNSなどで多くの情報に接し、反日教育の内容に疑問を抱く人も増加している。

日本がやるべきことは、このような新しい波が韓国中に拡大するように援護射撃をすることである。李在明政権が両国間ですでに解決済の歴史問題を蒸し返してくるならば、日本は真実をもって逐一反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李在明氏の主張する反日的歴史観が嘘であることを白日の下に晒させば、「反日感情」を土台とする彼の権威は失墜し、韓国保守派の巻き返しのための道が開ける。李在明氏の弾劾もあり得るかもしれない。

日韓両国民の未来のために、私は国際歴史論戦研究所の一員として韓国の同志と共にこれからも全力を尽くす所存である。合わせて日本国政府が国益を守る覚悟を決め、毅然として李在明政権に向き合い、その重大な責任を果たして行くことを願ってやまない。

이재명 정권과 한일관계

2025 년 7 월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상석 연구원
마즈키 쿠니토시

지난 6 월 3 일,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대다수의 예상대로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씨가 당선해, 정권을 장악했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 내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이재명 독재정권의 탄생

우선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모든 권력이 이재명대통령에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행정부 (行政府) 는 당연히 대통령 자신이 직접 파악한다. 총리 이하의 각료,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톱도 이미 측근으로 구성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여당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통령이 제시하는 법안과 예산안, 또한 인사안도 모두 프리패스다.

사법면에서는 어떨까. 대법원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현재 장관은 보수계이지만 2 년 후인 2027 년 6 월에 임기 만료되어 다음 장관은 사실상 이재명씨가 결정하게 된다. 다른 재판관들도 12 명 중 9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하고 교체한다. 대법원의 재판관은 대법원 장관의 추거 (推挙) 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후임은 정권에 가까운 인물들이 취임할 확률이 높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어떨까. 이 법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 장관이 각각 3 명씩 선출한 총 9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027 년 6 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이 대법원 장관에 취임하면 거의 전원을 이재명에 가까운 재판관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권력이라고 해도 되는 언론도 상황은 같다. KBS, MBC 등 공공방송국의 이사회 멤버들은 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위원회(KCC)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향에 따른 인물이 이사로 선정되고, 공공방송은 정권의 홍보기관이 되다.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가 없는 독재적 정권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일 선동으로 국민을 규합 (糾合)

한국 내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격차 확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중 인 저출산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 의존형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올해 1 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떨어졌다. 모두 구조적 문제이며, 짧은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불만은 필연적으로 이재명 정권으로 향하게 될것이다.

한국내의 보수 세력도 계속 침묵 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이재명씨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사 시대의 북한에 대한 부정 송금 의혹, 성남 시장 시대의 도시 개발에 관련되는 부정 의혹등을 둘러싸고, 현시점에서 5 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다. 대통령에 는 ‘불소추 (不訴追) 특권’이 있지만, 소인 (訴因) 이 대통령 취임 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모호하며, 앞으로 보수세력은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득표수를 봐도 40% 이상이 '반 (反) 이재명표'이며 보수파가 세력을 회복하고 2028 년 총선에서 압승하면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발의도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잡고 있어도 '반이재명' 여론이 고조되고, 판사가 여론에 영합하면 탄핵이 성립될 수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다루고 다음 총선에서도 정권여당을 승리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 정권이 단기간에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성과를 올리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결착된 과거의 역사 문제를 되살리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민의 불만을 모두 '일본에 대한 분노'로 전환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로만 한일협조노선을 주창하고 있어도 이재명씨의 본성이'친중 (親中)·반일 (反日)'이라는 것은 그의 과거 발언들을 봐도 분명하다.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씨는 “전 위안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 보상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명언하고 있어 “공약의 실행”을 구실로 2015 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내 “사죄와보상” 을 일본 측에 요구해 오는 것이 아닐까. 반일 감정이 강한 한국에서는 일본에게 강하게 대하면 할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한다. 그리하여 다음 총선에서도 여당 승리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씨가 다음으로 노리는 것은 한국헌법의 개정이다. 한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한정되어 있어 재선(再選)은 없다. 그동안 한국의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퇴임 후 유죄 판결을 받고 비참한 말로를 보냈다. 이재명씨도 대통령을 퇴임하면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 털면 먼지가 나는 그는 몇 가지 죄에 묻혀 파멸할 것이 뻔하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대통령 재선밖에 없다. 한국 대통령은 헌법 개정 제안권을 가지고 있어 이재명씨가 “미국과 같이 대통령 재선을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독재 체제 하에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연속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것이고 종신(終身)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조차 생각할지도 모른다.

일한이 협력해서 독재 체제에 맞서자

입법도 사법도 정권이 파악하고 반정부적인 활동이 합법적으로 탄압되게 되면 언론의 자유는 없어져 공산주의 체제와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친중·반일” 노선은 일미한(日米韓)의 제휴를 약체화시켜, 최악의 경우, 한국은 나라마다 중국에 삼켜질 우려마저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이라는 패권국가와 직접 대치하지 않을 수 없고, 일본의 주권과 독립이 위협받게 된다. 그러면 한일의 국민은 협력해서 이재명독재 체제에 맞서야 한다.

이재명씨가 한국민을 규합하기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하지만 그 '반일감정'이란 역사를 왜곡한 반일교육에 의해 프린트된 '역원한'(unjustified resentment)에 불과하다. 다행히 한국에서도 아직 소수이지만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연구자가 나타났다. 전 서울대 교수인 이영훈(李榮薰) 씨가 집필·편집한 '반일 종족주의'는 반일 교육에 있어서의 역사 왜곡부분을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파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반일교육에서 ‘성노예’라고 가르쳐 바든 위안부가, 단순한 매춘부였던 사실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알게 되어, 각지에 세워져 있는 위안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국인에 의한 시민 운동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젊은 사람들 중에는 SNS 등으로 많은 정보에 접해, 반일 교육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느끼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새로운 물결이 한국 전역에 확대되도록 원호사격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양국간에서 이미 해결된 역사문제를 되살리면 일본은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반론해야 한다. 이재명씨가 주장하는 반일적 역사관이 거짓임을 백일하에 드러내면 '반일감정'을 이용하는 그의 권위는 실추하고 한국 보수세력이 반격하는 길이 열린다. 이재명씨의 탄핵도 있을지도 모른다.

한일 양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국제역사논전연구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동지와 함께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국익을 지키는 각오를 다지고, 이재명 정권에 맞서고, 그 중대한 책임을 다해 나갈것을 바란다.

故安倍晋三氏がトランプ大統領に託した言葉～「慰安婦」と日韓関係

2025 年 9 月

国際歴史論戦研究所 所長
山本優美子

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自ら、日韓の「慰安婦」問題について大韓民国の首相（大統領）に語った。2025 年 8 月 25 日ホワイトハウスにて、大韓民国の李在明大統領との初の米韓首脳会談の席でのことだ。小一時間の会談の中で慰安婦についての発言は最後の 4 分程度であったが、正に故安倍晋三氏がトランプ大統領に話したであろう内容そのままを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大統領に伝えている。我々はトランプ大統領に感謝しつつ、日韓の友好関係について安倍氏が遺した言葉として心に留めておくべきだと思う。

トランプ大統領自ら切り出した「慰安婦」

切っ掛けは、韓国の記者がトランプ大統領に「訪米前に、李大統領は日本を訪問したが、韓米日の協力関係について議論すべきことはあるか」との質問だ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は自ら「慰安婦」について述べた。

「（日韓）両国をまとめるのは（束ねるのは）少し大変でした。というのは、あなた方はまだ「慰安婦」にこだわっているからです。そうですね？ 慰安婦です。慰安婦のことがばかりが話題にしたがってました。私は、この問題はこの数十年間で何度も解決されたと思っていました。」

「韓国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問題でしたが、日本にとって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日本は前に進もうとしていました。仲良くやっていきたいと。でも、韓国はこの問題にとっても固執していました。」

続けて日韓関係についての次のような見解を語った。

「日本は韓国と良い関係を築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もちろん、私は日本国民は素晴らしく、素晴らしい国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そして日本はぜひ韓国と良い関係を築きたいのです。両国には共通点があります。北朝鮮問題を解決したいということです。」

日本は韓国との良い関係を強く望んでいるし、また、私も必ずそうなると確信します。私が接（接触）した日本の人々は素晴らしい人たちで、韓国のあなたたちに対しても同じでしょう。」

最後に故安倍首相の名前を挙げ、日韓は素晴らしい関係になると結んだ。

「安倍首相は偉大な人物であり、私の偉大な友人でした。彼は暗殺されました。しかし、彼はあなたの国に非常に温かい感情を抱いていました。それは確かです。現在の首相も、私は非常によく知っていますが、同じように感じています。ですから、あなた方は日本と素晴らしい関係を築くでしょう。」

安倍・トランプと慰安婦問題

安倍首相が初めてトランプと会ったのは大統領就任前の 2016 年 11 月、ニューヨークのトランプタワーを訪問した時だ。2017 年 1 月にトランプ大統領が就任してから、2020 年 9 月安倍首相の辞任までのおよそ 3 年 8 か月間は日本国首相と米国大統領という関係だった。安倍氏が亡くなった 2022 年 7 月 8 日までを考えると 6 年近い交流があったことになる。

この間、韓国では 2017 年 5 月に文在寅政権が発足。2015 年 12 月の日韓外相会談合意によって、慰安婦問題は「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たにも関わらず、これを反故にする動きが続いた。

2018 年 1 月、当時の康京和外交部長官が、2015 年合意は真の問題解決とならないとする韓国政府の立場を発表。同年 11 月には韓国女性家族部が、日本の拠出金 10 億円で設立した「和解・癒やし財団」の解散を発表した。

2021 年 1 月、元慰安婦等が日本国政府に対して提起した訴訟にて、韓国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は、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の適用を否定し、日本国政府に対して原告への損害賠償の支払などを命じる判決を出した。

海外では韓国系団体が慰安婦像・碑の設置運動を主導した。2017 年以降も、海外の公有地だけでも米国のブルックヘブン（ジョージア州）、サンフランシスコ（カリフォルニア州）、フォートリー（ニュージャージー州）、独ベルリン、伊スティンティーノに像や碑が設置され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にとっては、2017 年 11 月の訪韓時、青瓦台（大統領府）で開かれた国賓晩餐で抱擁した高齢の女性が、自称元慰安婦被害者の李容洙氏であった事実を後に知る

ことになった一件も、もしかしたら「慰安婦」問題について関心を持つきっかけになったかもしれない。

国のトップの絆と歴史戦

トランプ大統領と安倍首相は日米首脳会談などの公式会談、電話会談だけでなく、一緒にゴルフをプレーするなど、親密な関係があったのは多くに人が知るところだ。在任中の会談回数は少なくとも30回から40回以上ともいわれている。

そういった関係にあっても、「慰安婦」と日韓関係をトランプ大統領に説明するのは、簡単ではなかっただろうと察する。海外では特に「慰安婦」は歴史問題ではなく女性の人権問題としてとらえられる。被害者と称する女性には同情せねばならず、彼女らの発言を否定することは許されないという圧力がある。慰安婦の雇用契約について歴史事実の（を記述した）論文を発表して世界中からバッシングをうけた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のマーク・ラムザイヤー教授がその例だ。

今回の米韓首脳会談でトランプ大統領が自ら「慰安婦」を切り出し、韓国大統領に話したのは、トランプ大統領が故安倍首相を深く信頼し、その意味を充分理解していたからであろう。

安倍首相が亡き今、今回の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は、日米両国トップの絆が遺してくれた我々日本と韓国へのメッセージといえよう。安倍晋三氏は天国から「トランプ大統領、ありがとう」と微笑んで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고아베 신조씨가 트럼프 대통령에 맡긴 말~「위안부」와 한일관계

2025 년 9 월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소장
야마모토 유미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말했다. 2025 년 8 월 25 일 백악관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미한정상회담 자리에서의 일이다. 한시간의 회담 속에서 위안부에 대한 발언은 마지막 4 분 정도였지만, 확실히 고아베 신조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 내용 그대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했다.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면서 한일의 우호관계에 대해 아베 씨가 남긴 말로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말하기 시작한 '위안부'

계기는 한국의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미 전에 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미·일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해야 할 일은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위안부'에 대해 말했다.

“(일한) 양국을 묶는것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당신분들이 아직도 「위안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위안부입니다. 위안부의 말만이 화제로 할려고 했습니다. 나는이 문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한국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였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사이 좋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에 매우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

이어 한일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말했다.

"일본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일본 국민은 훌륭하고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꼭 한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양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강력히 바라며, 또, 나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내가 접촉한 일본의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며, 한국의 당신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아베 총리의 이름을 들고 한일은 훌륭한 관계가 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나의 위대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나라에 매우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총리도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베·트럼프와 위안부 문제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트럼프와 만난 것은 대통령 취임 전인 2016 년 11 월 뉴욕 트럼프
타워를 방문했을 때다. 2017 년 1 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20 년 9 월 아베 총리
사임까지 약 3 년 8 개월간은 일본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라는 관계였다. 아베씨가 죽은
2022 년 7 월 8 일까지를 생각하면 6 년 가까운 교류가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2017 년 5 월 문재인 정권이 발족. 2015 년 12 월 한일 외상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지화 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2018 년 1 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 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 같은 해 11 월에는 한국 여성가족부가 일본의 기부금
10 억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했다.

2021 년 1 월 전위안부 등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에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불
등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는 한국계 단체가 위안부상·비 설치운동을 주도했다. 2017 년 이후에도 해외의
공유지만으로도 미국의 브룩헤븐(조지아주),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주),
포트리(뉴저지주), 독 베를린, 이탈리아 스티티노에 동상과 비가 설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2017 년 11 월 방한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 만찬에서 포옹한 노인

여성이 자칭 전 위안부 피해자의 이용수씨였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일도 어찌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국가 톱의 유대와 역사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일미 정상회담 등 공식회담, 전화회담뿐만 아니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곳이다. 재임중의 회담 횟수는 적어도 30 회에서 40 회 이상이라고도 한다.

그런 관계에 있어도 '위안부'와 한일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특히 '위안부'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 문제로 파악된다. 피해자라고 칭하는 여성에게는 동정해야 하며, 그녀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압력이 있다. 위안부 고용계약에 대해 역사사실을 기술한 논문을 발표하고 전세계에서 배상을 받은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그 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한국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아베 총리를 깊이 신뢰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베 총리가 사망한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양국 톱의 유대가 남겨준 우리 일본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신조씨는 천국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라고 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これまでの国際シンポジウム

第一回 慰安婦問題を巡る 日韓合同シンポジウム 2022

2022年11月16日 東京 文京シビックスカイホール



<https://i-rich.org/?p=989>

第二回 慰安婦問題日韓合同シンポジウム 2023

2023年9月5日 ソウル コリア・プレスセンター



<https://i-rich.org/?p=1649>

第三回 慰安婦問題を巡る国際シンポジウム 2024

2024年7月10日 東京 星陵会館



<https://i-rich.org/?p=2077>

第四回「日韓合同 シンポジウム 2025」 資料

発行日：令和 7（2025）年 11 月 27 日

編集・発行：一般社団法人 国際歴史論戦研究所

事務局：〒112-0005 東京都文京区水道 2-6-3-2F

メール：info@i-rich.org

電話：03-6912-1045

FAX：03-6912-0048